

박근혜의
시간제 일자리와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

▶ 10, 11 면

재정 위기와
공공부문
공격

▶ 3 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 8 ~ 9 면

미국의
일본 제국주의
후원

▶ 12 면

진보당
강제해산
반대한다

▶ 14 ~ 15 면

전교조 —
단체행동은
의미 있다

▶ 20 면

발행인_김인식 편집인_김인식
인쇄인_ (주)아아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_2009년 1월 12일
주소_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02-777-2792 팩스_02-6499-2791
제보_02-777-2791 E-Mail_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Left21.com

제115호 | 2013년 11월 11일 ~ 11월 24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리포트21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는 저질 일자리 확대책일 뿐이다

박근혜는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하겠다고 시간제 일자리를 핵심 정책으로 꺼내들었다.

청년들을 포함해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어서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문제다. 오랫동안 진보진영은 정부가 공공부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가 하려는 것은 이와는 정반대다. 좋은 일자리 군(群)의 아성을 깨고 유연화를 강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총 같은 기업주 단체는 “과도한 고용보호법과 강성 노조의 중첩적 보호를 받는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 부문으로 인해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 경직성이 심화”됐다고 불평해 왔다. 그들은 규제를 덜 받고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일자리를 확대하고 싶어 한다. 박근혜가 노동유연화를 적극 추진하는 이유다.

첫 타격은 공공부문으로, 정부는 전일제 일자리 하나를 쪼개 두 개의 시간제 일자리로 대체하겠다고 한다. 시간제 일자리는 곧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는 고용률 수치를 조금 올리는 통계 장난을 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층의 증가로 전체 노동계급의 처지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간제 노동자가 늘어난 영국에서 최근 실업을 하락의 이면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 10·11면으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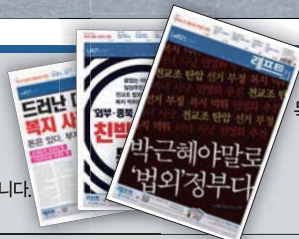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리포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 말일까요?

“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정말 능숙하다.”
바락 오바마가 드론(무인폭격기) 공격에 대해 보좌관한테 한 말

“소수의 특권계급과 비타협적으로 싸워 정치적 특권뿐만 아니라 경제적 특권까지도 빼앗으려는 것[이 문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한 법무부의 너무 솔직한 설명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하고”는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하고’로,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는 ‘전쟁을 준비하자’로”
국정원이 마시지한 이석기 의원의 강연

“아들딸 예금 중 1억 원은 세벳돈 · 용돈 모은 것”
검찰총장 후보자 김진태, 세벳돈을 수표로 주나?

“대통령의 패션 보도가 더 강조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모한

“노조에 가입하면 북한으로 다시 보낼 수 있다.”
경기지역 한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사장이 탈북자 출신 노조원에게

“우리 서민들은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는 차라리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고 부르짖는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손병두의 부르짖음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정말이야 독재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은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박정희 추모 예배에서 원미동교회 목사 김영진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각하[박정희]가 생각했던 나라가 돼 가고 있다.”
21세기선진포럼 총재 성보경의 감격

“대선불복이냐고? 음!”
해외 못 자람 나간 박근혜를 ‘환영’한 파리 시위대의 구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월요일 (다음호 가판은 11월 25일)	
서울 건대입구역 4번 출구 19:00~20:00	
울산 현대차 4공장 구 정문 건너편 14:30~15:30	
격주 화요일 (다음호 가판은 11월 26일)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19:00~20:00	
서울 혜화역 4번 출구 19:00~20:00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19:00~20:00	
수원역 롯데리아 앞 광장 19:00~20:00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넌편(오아시스빌딩) 19:30~20:30	
격주 수요일 (다음호 가판은 11월 27일)	
서울대병원 후문(혜화역 3번 출구) 8:00~9:00	
격주 토요일 (다음호 가판은 11월 30일)	
울산 성남동 젊음의 거리 중부소방서 옆 19:00~20:00	
대학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11월 25~27일)	
건국대(서울) 학생회관 앞 월요일 12:00~13:00	
부산대(부산) 정문 앞 월요일 11:50~12:50	
원광대 학생회관 로비 월요일 12:00~13:00	
고려대(안양) 정경대 후문 화요일 16:30~17:30	
이화여대 포스코관 지하층 입구 화요일 14:30~15:30	
인천대 학생회관 입구 화요일 12:30~13:30	
국민대 법학관 1층 식당 앞 수요일 12:00~13:00	
충남대 공대 2호관 앞(죽문) 수요일 11:30~12:30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서울 : 그날이 오면(서울대 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질(성균관대 앞),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응암동), 역사전문서점 물음(변동사거리)	
울산 :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중동 각국에 전해진 한국 노동계급의 연대

한국의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이 바레인 민중에게 연대한 소식이 아랍 민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다.

바레인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지만, 인구의 절반은 월 90만 원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빈곤층이다. 이런 끔찍한 불평등과 지속적으로 억압적인 왕정 체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아랍의 봄’ 이후 2년 반이 넘도록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왕정은 지난 2년 반 동안 하루 평균 최루탄 2천 개를 쏘다. ‘테러’를 저질렀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집회 참가자가 한 달 동안에만 1백 명이 넘는다. 여기에는 10대 청소년도 많이 포함돼 있다.

특히 바레인은 최루탄 오남용으로 악명이 높다. 2011년 이후 39명이 가스에 질식사하거나 머리 부위에 치명상을 입는 등 최루탄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인권을 위한 의사회’). 보름에 한 명꼴로 이한열 열사가 생겨난 셈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 노엄 촘스키, 존 필저 등 세계적 지식인과 활동가 들도 최루탄 수출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산 최루탄 바레인 수출 반대 행동.

그러나 각국 지배자들은 바레인 민중의 시위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바레인에 중동을 관장하는 미 해군 제5함대가 주둔한다는 이유로 탄압을 옹호하기에 급급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유네스코 국제교육국은 탄압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주요 직책을 바레인에 맡겼다. 외신들도 바레인 시위 소식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

한국 정부와 자본가들 역시 다르지 않다. 정부가 아랍에 파병한 군대는 현지 경찰을 훈련시켰고 바레인 시위 진압에 동원됐다. 경상남도 김해에 위치한 대광화공이라는 업체는 지난 2년간 1백만 개 넘는 최루탄을 수출했다.

그러나 한국 노동자 계급의 대응은 달랐다.

10월 중순, 바레인 왕정이 탄압을 지속하기 위해 전체 인구 수(1백20만 명)보다도 많은 최루탄을 수입하려 한다는 문건이 폭로되자 바레인 민중 시위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한국 노동계급에 연대를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즉각 수출허가를 관장하는 경찰청과 방위사업청에 수출 중단을 촉구했다. 전교조 역시 다른 30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왜 한국의 최루탄이 바레인을 울리는가? 수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방위사업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의원 중 통합진보당 의원 6명도 수출 중단 캠페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8일 현재, 더 늘 수 있다.)

이 소식은 빠르게 바레인과 아랍으로 전해졌다.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민주노총의 입장을 영어로 번역하자 ‘중동 · 북아프리카연대’가 게재했다. ‘바레인 위치’ 역시 “한국의 강력한 민주노총이 방위사업청에 항의 편지를 보내 수출 허가를 거부하라고 요구했다”고 소식을 전했고, 레바논의 아랍어 언론 <알 아크바>도 “민주노총이 최루탄 수출을 규탄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하고 보도했다.

지난 2일 ‘중동 · 북아프리카연대’ 관계자는 “해당 소식을 보려고 바레인에서 직접 유입된 조희수만 해도 1천 명이 넘는데 이는 꽤 많은 사람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라고 알려왔다. 바레인은 ‘국경 없는 기자회’가 북한 · 중국 등과 함께 “인터넷의 적”으로 규정할 만큼 인터넷 검열과 접속 차단이 심하다.

왕정의 탄압과 각국 지배자들의 외면에 맞서 싸우는 바레인 민중에게 한국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큰 힘이 됐을 것이다.

김종환

한국 성 평등 지수 111위

드러난 ‘여성 대통령 시대’의 실체

세계경제포럼(WEF)이 ‘2013 세계 성격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1백36개국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경제적 참여 · 정치 권한 · 교육 수준 등의 격차를 분석했다. 여기서 한국은 1백11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들 중 터키 다음으로 꼴찌다.

여성 대통령 시대라며 으쓱거리던 박근혜 정부가 윤창중 성희롱 사건으로 망신살 뻗치더니, 이번 보고서로 생색낼 건 터기조차 사라진 것이다.

여성이족부 장관 조윤선은 성 격차 보고서의 “통계나 자료 부실”을 문제 삼았다. 2008년부터 한국이 1백 위 안에 들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본다면 참 비루한 해명이다. 게다가 이번 통계에서 아랍에미리트가 1백9위, 바레인이 1백12위를 기록했는데, 한국의 우익과 이슬람 혐오주의자들이 아랍 국가들의 여성 인권 운운하며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역겨운 일이었는지 보여 준다.

보고서의 세부 지표들을 보면, ‘여성 문맹률’과 ‘기대수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국은 거의 모든 지표가 바닥을 기고 있다. ‘여성의 정치 권한’ 지표는 86위로 여성 대통령의 존재와 큰 괴리를 보였다.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의 15퍼센트, 정부 요직 중 여성 공직자는 약 2퍼센트에 불과하다. 여전히 여성의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노동계급 여성들의 삶이다. 노동계급 여성들은 ‘유리천장’까지 올라가 보기는커녕 바닥에서 발버둥치고 있다.

부차적 노동력

특히 ‘경제적 참여 및 기회 지표’가 지난해에 건취 두 계단 후퇴한 1백18위를 기록했다. 대체로 남성과 여성의 노동조건 격차가 벌어진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2012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와 비교해 보면, 2013년 들어 여성의 노동 참여는 87위로 네 계단 뒤로 밀렸고, 여성 소득은 남성 소득의 44퍼센트 수준으로 1백8위에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유사업종의 남녀 임금 격차는 세 계단 후퇴해 1백20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여성이 지금껏 투표도 못하고 차량 운전도 금지된 사우디아라비아(1백11위)보다도 낮은 것이다.

이런 전반적 후퇴는 박근혜의 여성 정책과도 관련 있다. 박근혜는 취임 후 여성을 위한 정책을 언급했는데, 그러면서

압도 다수가 여성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했다.

박근혜가 내놓은 대표적인 여성 정책 중 하나인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육아와 생계의 이중 굴레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시간제 일자리를 감내하는 여성의 처지를 아예 공고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선 때 약속했던 무상보육은 정부가 재정 책임을 회피하면서 시작부터 위기를 맞이했다. 사실상 박근혜의 여성 노동 정책은 또다시 여성들에게 ‘양육도 저질 일자리도 더 감내하라’는 것이다. 안 그래도 열악한 여성의 조건을 더 옥죄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여성 차별은 노동계급 남성에게도 해롭다. 이번 보고서가 여성과 남성 사이의 큰 격차를 보여 준다고 해서, 그것이 평범한 남성들이 월등히 좋은 조건에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배계급은 여성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남성들의 노동조건을 발목 잡고, 궁극적으로 노동계급 전체의 조건을 하락시키려 한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 ‘남성 · 대기업 · 정규직 위주’로 짜여진 고용시장을 탈피해야 한다며 고용이 조금 더 안정적인 일자리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합법적 노예로 부리는 한국 정부와 사용자들

월 3백 시간에 가까운 노동, 월 평균 21시간의 무보수 노동,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 상습적 임금 체불, 강제 노동, 폭행과 폭언, 두 명 중 한 명 꼴로 산재 피해, 냉난방도 안 되는 최악의 가건물 기숙사, 추방 위협 ….

이 목록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일부 나열한 것이다. 여기에 여성이라면 성추행과 성폭행의 공포가 추가된다.

어느 분야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는 이와 비슷한 처지를 겪지만, 농축산업은 노동법이 부분적으로만 적용되는데다 일터와 주거 공간이 고립돼 있어 실태가 훨씬 처참하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여성노동자 비중이 다른 분야보다 세 배가량 높아 상황이 더 심각하다.

심지어 농장주들은 ‘폼앗이’라며 이주

노동자를 무보수로 돌려 쓰고, 농한기에는 월급을 안 주려고 다른 곳에 보내 일을 시킨다. 이 일이 적발되면 ‘불법 취업’으로 그 책임을 노동자가 뒤집어쓰고 추방된다. 정부는 이런 실태를 잘 알지만, 감독 · 규제는커녕 되려 이 분야의 인력 도입을 늘리고 있다.

귀국보증예치금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은 대부분 가혹한 조건을 견디지 못해 직장을 옮기고 싶어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거나 방법을 찾지 못해 도망쳐 나오면서 비용을 잃는다. 그러면 정부는 이들을 단속해 추방해 버린다. 또한 미등록 이주자 단속을 강화하고 직장 변경을 사실상 금지하는 등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비대위 위원장

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려 7년째 이주노조 설립 인정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또, 정부는 이주노동자 송출 국가들에게 노동자들의 직장 이탈이나 미등록 체류를 막도록 압박을 가한다. 정부는 해마다 미등록 이주자 발생 비율을 집계해 이 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인력 도입을 금지시킨다. 그래서 인력 송출이 금지된 베트남 정부는 최근 한국으로 가는 노동자에게 5백60만 원을 강탈하는 ‘귀국보증예치금’ 제도를 만들었다.

정부는 이토록 야만적이고 체계적인 차별이 ‘자국민을 우선시’하는 당연한 정책이라고 뻔뻔스럽게 말한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로 실제로는 득을 보지 않는다. 오히려 노동자

들 사이에 인종 차별과 분열만 부추겨 계급의 단결을 약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방어하고 연대해야 한다.

이정원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국가기관 총체적 대선개입, 검찰 수사 방해, 박근혜 정부 규탄	
20차 촛불집회 11월 16일(토) 오후 6시 서울시청광장 주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사국회의	
국가기관 총체적 대선개입, 공판짜기, 노동탄압 규탄	
법국민 촛불집회 11월 23일(토) 오후 6시 서울시청광장 주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사국회의, 박근혜 정부 공판짜기 규탄 공동행동	

공공요금 인상과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

박근혜 정부는 재정 위기 책임 전가 말라

최근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데,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방만 경영의 요인”이라며 문제 삼았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지침과 상이한 공공기관 단협’을 시정하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적법한 정의행위 시 조합·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금지’, ‘조직과 인사 개편에 대한 노사 간 협의’, ‘장기근속휴가·안식년·경조비 지급’ 등 24가지 사례를 ‘불합리한’ 단체협약으로 지정했다. 최근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서울대병원의 경영진도 단협 조항 중 ‘직원 가족 선택진료비 면제’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노동조합 권리다.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향상시키고 이를 단협에 반영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가장 기초적인 구실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노동자 임금인상률을 2.8퍼센트로 제한하더니, 이제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 권리마저 박탈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도 거부한 데 이어, 공무원노조가 대선에 개입했다며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 연금을 삭감하는 등 임금·노동조건을 공격할 발판을 마련하려는 속셈일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가 이명박 정부 때 급증했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제외한 공공기관 2백93곳의 부채 총액은 2008년 2백90조 원에서 2012년 4백93조 4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2012년 국가부채 4백43조 7천억 원보다 많은 것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올해 5백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국가부채가 국내 총생산(이하 GDP) 대비 35퍼센트 정도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아,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고 홍보해 왔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국가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합쳐서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는 GDP 대비 75퍼센트로 급증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저출산·고령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은 민간부문으로 이어질 공격의 신호탄 10월 26일 공무원노조 결의대회.

화 심화, 성장률 하락 등으로 공공부채가 급증할 수 있고, 따라서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 지배자들에게 공공부문 부채 문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도 하다. 재정 위기가 다시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 부채

한국의 공공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평가되면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것이고, 그러면 국제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결국 시중금리가 오를 수 있다. 금리 인상은 가뜩이나 취약해진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게다가 조만간 추진될 가능성이 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까지 겹치면 금리 인

상 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는 양적완화가 축소되면 미국 국제 금리가 1퍼센트포인트 가량 오르고, 그 여파로 점차 국내 기업·가계 대출 금리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만약 시중금리가 1퍼센트포인트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각각 연간 11조 1천억 원, 14조 5천억 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금리 인상은 조선·해운·건설·부동산 등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의 부실 위험을 더욱 키울 것이고, 이는 한국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낳을 수 있다.

현재 국내 은행들의 조선업 대출액은 최소 50조 원 이상, 해운업 대출액은 2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조선업의 대출 연체율(3월 말 기준 약 13퍼센트)을 감안하

면 최대 10조 원의 부실 채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조선·해운 위기는 은행 위기로 퍼져 한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또한 이미 1천조 원이 넘는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가중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연체율이 급등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지배자들은 지금 공공부문 부채를 줄이려고 사활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쥐어짜려 한다.

이 때문에 최근 박근혜 정부는 자산 2조 원 이상인 공공기관 41곳의 부채를 줄이려는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내놔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올 7월에 내놓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에서도 이명박 정부 때 급격하게 늘어난 공공부문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쥐어짜기

이 계획들에는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노동조건 악화뿐 아니라 전기·상수도·가스·고속도로·철도 요금 인상도 포함돼 있다. 실제로 최근 전기, 지역난방, 서울·강원 지역 도시가스, 부산 지역 하수도, 울산·충북 버스 요금의 인상 계획 등이 나왔거나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부채 급증에 노동자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보수 언론은 “철밥통”, “신의 직장”이란 자극적 표현을 쓰며 공공부문 노동자들 때문에 부채가 급증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명박 정부 때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한 것은, 경제 위기에 대응해 대기업·부자를 살리려고 부동산 경기 부양, 대기업 요금 지원, 해외 자원 개발 등에 공공기관들을 대규모로 동원했기 때문이다.

토지주택공사인 LH공사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인 보금자리주택으로 23조 8천억 원의 부채를 떠안았다. 수자원공사는 총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 가운데 8조 원을 담당하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도 2008년부터 5년간 발생한 적자 9조 6천억 원 등 때문에 부채가 급증했다. 그런데 한전이 지난 10년간 100대 기업에 원가 이하로 할인해 준 특혜 전기요금만 9조 4천3백억 원에 이른다.

5년 동안 난 적자만큼의 돈을 10년 동안 대기업에게 할인 가격으로 값싼 전기를 공급해 준 셈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적자를 메우려고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

상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호주머니를 털어 대기업 급고를 채워 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광물자원공사, 대한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같은 자원 관련 공기업들이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입한 비용도 4대강 사업에 투입된 22조 원의 곱절에 육박하는 43조 원에 이른다.

예를 들어, 광물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5년간 2조 8천억 원이 넘는 해외 투자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회수액은 2천5백억 원에 불과했다. 한국가스공사도 2008년부터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뛰어들어, 투자액만 5조 9천억 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18조 원 정도였던 가스공사 부채는 2013년 32조 원으로 증가했다.

철도공사 부채는 상당 부분 (1) 철도청 시절 KTX 건설사업에 들어간 정부 부채 중 4조 5천억 원을 떠안은 것, (2) 민자로 건설된 인천공항철도의 적자가 계속되자 이를 인수해 주면서 2조 원가량의 빚을 더 지게 된 것, (3)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 노선을 운영한 것 때문이다.

공공기관 부채뿐 아니라 국가부채의 증가도 상당 부분은 대기업들을 위해 환율·물가 안정에 쓴 것이 이유였다.

2001~10년 국가부채 증가분 2백 60조 7천억 원 중 절반 가까이 되는 1백 20조 5천억 원은 외화 자산 매입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데 쓰였다. 외환시장 안정화 때문에 국가부채가 늘자 그 이자 갚는 데 돈을 쓰느라 복지 확대에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들을 대기업·부자를 위해 동원하면서 부채를 늘려 놓고는, ‘공공기관 선진화’ 운운하며 이미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임금 동결, 단협 악화, 대출 초임 삭감 등으로 그들을 쥐어짜 왔다.

따라서 공공기관 부채든 국가부채든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그 밖의 다른 노동자들은 득 본 것이 없고, 책임질 이유도 없다. 오히려 각종 특혜와 감세를 누린 재벌들과, 또한 이제 와서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등에 “협조”한 박근혜에게 책임이 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임금·노동조건을 지키려 싸우는 것은 재정 위기의 책임을 노동계급에 전가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맞서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그동안 공공부문 부채 확대로 득을 본 대기업·부자에게 세금을 거둬 공공기관을 지원하고, 공공기관들이 노동자·민중에게 저렴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강동훈

공무원 노동자 임금·노동조건 공격

단호하게 저지선을 긋고 싸워야 한다

박천석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처장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내년 공무원 실질임금을 삭감했고, 수당도 삭감하더니 급기야 공무원의 미래인 연금까지 공격하려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장해 온 문형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힌 것은 연금 개악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질 낮은 시간제 공무원을 도입해서 그나마 안정적 일자리인 공무원 일자리도 위협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에 설립신고를 내줄 것처럼 하다가 뒤통수 치더니, 이제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을 공격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공무원노조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공격도 하고 있다. 이는 국정원 게이트 물타기 품수이지만,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공격을 위한 길 닦기이기도 하다.

이간질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를 공격하면서 고약한 이간질을 써먹곤 한다. 최근에 정부는 연간 1천만 원에 가까운 국공립대 공무원 수당(기성회 수당)을 폐지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반값등록금 실

현”을 위해서라며 공무원 노동자들과 학생·학부모 사이를 이간질했다. 수당 폐지로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는 이번에는 재정회계법이 제정되면 수당 삭감을 벌충해 주겠다는 말을 흘리며 공무원 노동자들을 구스르려 한다.

그런데 재정회계법은 회계상에서만 기성회비가 사라지고 등록금은 전혀 줄지 않고, 국립대 법인화(민영화)의 길을 닦는 법으로, 진보적 학생들이 반대해 왔다. 정부는 재정회계법을 제정한 후 또다시 공무원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노동자들은 국공립대 공무원 수당 폐지 반대와 재정회계법 제정 반대를 함께 내걸고 국가가 교육 재정

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며 대학생들과 연대해 투쟁해야 한다.

정부와 보수 언론이 “공무원연금 적자 메우느라 복지 예산이 압박 받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 반대는 ‘철밥통’들의 이기주의”라고 공격하는 것도 이간질해 각 개격파하려는 것이다.

투사들은 정부의 이간질에 맞서 단결을 고무하는 주장과 실천을 해 나가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임금과 수당 삭감,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할 뿐 아니라 기초연금 개악에도 반대해야 하고, 시간제 공무원 도입에 반대하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

지금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부의 전방위적 공격에 불만이 매우 높다. 지난 10월 26일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력 결의 대회에 3천5백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것은 이런 불만을 보여 준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시간제 공무원, 임금과 각종 수당 삭감 등에 맞서 조합원들의 불만을 실질적인 투쟁으로 모아 내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지금 단호하게 저지선을 형성하지 못하면 정부의 공격이 공공부문을 넘어 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금 공무원 노동자들이 저항에 나서 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지하철노조

퇴직금누진제 폐지는 노동자의 미래를 강탈하는 짓

최미진

서울시 공기업들에 대한 퇴직금누진제 폐지 압박이 거세다. 올해 서울지하철 노조 임단협 투쟁의 핵심 쟁점도 바로 이 문제다.

정부와 보수언론, 서울시는 한 목소리로 ‘공기업 노동자 특혜’ 운운하고, 서울 지하철의 부채가 마치 노동자 탓인 양 공격하고 있다.

퇴직금누진제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곱하는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누진제가 사라지면 노동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본다.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은 퇴직금이 심지어 반으로 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자녀들이 대학 가고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부양해야 하고, 복지도 매우 적은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게다가 평균 수명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누진제는 공기업 노동자들에게 불안한 노후에 안전망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실낱 같은 희망이자, 비밀 언덕이었다. 누진제가 적용되는 지금도 “자녀 대학 학자금을 내고 나면 퇴직금이 마이너스”라는 지하철 노동자들이 많다.

따라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미래를 강탈하는 중대한 공격이다.

퇴직금누진제 폐지는 재정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공격의 일환이다. 정부는 “IMF 공황” 직후부터 공공기관에서 누진제를 폐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는 누진제를 유지하는 지방공기업에는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매겨 성과급을 주지 않겠다는 지침을 내렸다.

공기업 노동자 이기주의?

정부는 IMF 이후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기 시작하면서, “공공부문이 민간기업과 공무원에 비해 과다한 퇴직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0인 이상 민간기업의 절반가량이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공무원은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공기업 노동자들보다 30퍼센트 가량 상회하는 퇴직금을 받고 있었다.

즉, 퇴직금누진제는 보편적인 현상이었다가, 경제 위기에 노동자들에게 내뿜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폐습’ 취급받기 시작한 것이다.

누진제로 받는 퇴직금은 노동자들이 차세대 노동력을 양육하거나 질병과 노후 보장을 고려해 현재의 임금 일부를 미래에 대신 받는 ‘후불 임금’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누진제는 나이가 들수록 목돈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제도다.

대법원도 ‘후불 임금’의 성격을 인정해 왔다. 퇴직금누진제 폐지는 노동자 임금의 손해이므로 반드시 단협을 통해 노동자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서울 지하철 부채가 퇴직금누진제 탓이라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서울메트로 영업 적자의 주요 부분은 무임수송비용과 원가보다 낮은 요금이다. 이것은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착한 적자’이고,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오히려 이런 적자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보상제도가 서울지하철에도 도입돼야 마땅한 마당에, 애먼 노동자 퇴직금을 공격하는 것은 속죄양 삼기일 뿐이다.

지난 10여 년간 공공기관 정규직 노조들이 퇴직금누진제라는 ‘특혜’를 버린 것이 다른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민간기업도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해, 모두가 하향평준화되는 길을 열어 줬을 뿐이다.

민주파 집행부의 존재 이유

퇴직금누진제의 마지막 보루인 서울 지하철노조가 누진제를 지켜야 재정 위기의 책임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정부의 파산 공세에 맞서 싸우는 데도 유리하다. 실제로 다른 서울시 공기업들도 서울지하철노조의 임단협 결과만 지켜보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들이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해 노동자들이 13년 만에 우파 위원장을 낳았고 민주파 집행부를 세운 이유가 바로 전임 위원장 정연수가 퇴직금누진제 시행을 합의해 버렸기 때문이었다. 노동자들은 이에 엄청나게 분노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하철노조의 새 민주파 집행부는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수용한 채, 보전 방식과 보전 액수만을 임단협의 쟁점으로 삼으려 한다. 이미 서울모텔협의회(서울시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해 퇴직금누진제 폐지 내용이 포함된 조정서에 합의했다.

노조 지도부는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



사진 출처 서울지하철노조본부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10월 11일 2013 임단투 승리를 위한 조합원 총회.

실을 최대한 보전받는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한다. 누진제를 적용받지 못하던 2000년 이후 입사자들에 대한 차별도 없애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 누진제 폐지를 분명히 거부했으므로, 이런 거부 의사를 민주파 집행부가 온전히 받아 안고 가는 것이 옳았다. 2000년 이후 입사자들에게도 누진제를 적용하라고 요구해 단결을 도모해야 했다.

노동자들은 현재 얼마를 보전받든, 근속연수가 길수록 누진적으로 늘어나는 미래의 퇴직금이 사라지는 것 자체가 더

큰 손해임을 안다. 정부와 서울시가 (손실액을 보전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퇴직금누진제만큼은 없애려고 혈안이 된 이유도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부담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지렛대로 성과급을 확대하는 등 임금 유연화를 추구해 왔으므로 노동자들이 이를 더욱 수용해선 안 된다.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액의 50퍼센트만 보전하기로 한 조정서 내용도 조합원들의 의심과 불만을 사고 있다. 최근 열린 서울지하철노조 대의원대회에서도

‘겨우 50퍼센트 보전 받자고 투쟁하는 것인가’ 하는 목소리가 여럿 나왔다.

물론, 정부와 서울시가 워낙 강경해서 결코 만만치 않은 싸움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 위기의 장기화로 말미암아, 사용자들이 순순히 양보하는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강력한 투쟁을 해야만 노동조건을 그나마 지킬 수 있다. 투사들이 퇴직금 같은 평조합원들의 핵심 불만을 충실히 대변해야만 평조합원들이 투사들의 존재 이유를 실감하고 투사들의 힘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임금·노동조건 후퇴 압박하는 박원순 시장

개혁 염원을 엮고 당선한 박원순 시장이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에게 노동조건 후퇴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특별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12년 동안 당선들만 혜택을 받았으니 이제 양보할 때가 됐다”며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를 맞바꾸라고도 강요하고 있다. 구조조정 컨설팅 업체로 악명 높은 맥킨지에 서울지하철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기고, 서울시 부채를 줄인다면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두 지하철공사 통합안도 고려 중이다.

임금피크제와 퇴직금누진제 폐지의 경우, IMF 이후 15년 동안이나 시도됐

지만 노동자들의 반감과 저항으로 도입하지 못했던 개악이다. 정작 개혁파를 자처하는 인물이 등장에 이를 처리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수파나 개혁파나 집권하면 똑같다’는 환멸과 실망을 안겨 줄 수 있다. 이것은 노동자 운동이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박근혜의 기초연금 개악에 맞선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의 투쟁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이 기존 기초노령연금에서도 후퇴한 개악안이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최근 조사를 보면 정부안대로 할 경우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약 70퍼센트가 기초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반더라도 일부 삭감된다.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덜 받는’ 연금액은 2020년에는 6천 2백12억 원, 2030년 2조 5천7백5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재정이 불안정한 지자체에 일부 재정 책임을 떠넘겨, 무상보육처럼 재정난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다 보니 가입 의무는 없지만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들이 탈퇴해 민간 개인연금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근혜의 기초연금·국민연금 개악이 민간 보험사들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8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산하에 연금탐을 신설해 민간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통 터뜨리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악화와 기초연금·국민연금 개악에 맞서 투쟁에 나서고 있다.

11월 5일에는 수도권 소속 조합원 2천여 명이 여의도에 모여 박근혜의 기초연금 개악을 규탄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

성과급

총회에서 노동자들은 박근혜의 개악안 때문에 노동조건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임의가입자들이 대거 탈퇴하고 있고 온갖 항의성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공단 축이 탈퇴자 수를 숨

끼려고 임의가입자 모집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일부 지사에서는 반환일시금*을 미끼로 50대 후반의 농어민들에게도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어촌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가입 뒤 몇 년 동안 보험료를 내다가 탈퇴하면 이 보조금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며 가입을 유도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들은 대부분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은 연금 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공단은 이 실적을 기준으로 전국 91개 지사를 줄 세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에 서] 성과급을 균등분배 하기로 해 상관

없지만, 지사 간부들은 최대 1천5백만 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과급 때문에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공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때문에 임금도 2.5퍼센트 이상은 올릴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국민연금노조는 임금 8.9퍼센트 인상, 노동조건 개선,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요구하며 11월 6일부터 파업 찬반 투표

를 시작했다.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이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장호중

반환일시금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받을 수 있다.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공단에서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한다.

새로 나왔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악의 쟁점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쟁과 대안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쟁과 대안 — 기초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개악의 쟁점》 박천석·장호중 지음, 노동자연대다함께, 64쪽, 3,000원

구입 문의 :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깊어져 가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쟁과 갈등

지난 6월, 전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미국 국가안보국(이하 NSA)의 사찰 파문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처음에는 NSA가 프리즘 같은 정보 수집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전 세계에서 통화와 인터넷을 광범하게 감시해 온 것이 폭로됐다. NSA는 구글, 페이스북, 야후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서버에 접속해 정보를 얻기도 했다. 2013년 3월 한 달에만 NSA는 전 세계 전산망에서 9백 70억 건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의 명분으로 제시한 통킹만 사건이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을 폭로한 대니얼 엘스버그는 최근 사태를 보며 자국민에 대한 NSA의 감시 능력이 “옛 동독의 보안경찰 슈타지조차 상상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그런데 이는 단지 민간인들의 개인 정보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NSA와 CIA가 각국 정부 주요 인사와 정치인 들을 불법으로 도청하고 비밀리에 감시해 온 것도 폭로됐다.

심지어 독일 총리 메르켈 같은 우방국 정상들도 도청과 감시의 대상이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이들 정상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일로 미국 정부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미국은 NSA의 불법 사찰에 대한 비판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개인 정보 수집은 테러 방지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며, 각국 정부 간의 스파이 행위도 서로 묵인해 온 관행 아니냐며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한사코 막으려 한다.

물론 미국 지배자들의 변명에는 일말의 진실이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과 기업들은 어떻게든 경쟁에서 우위에 서려고 서로 엿탐하고 정보를 캐내려 해 왔다. 마르크스의 지적대로 이들은 모두 “싸우는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푸틴 정부도 G20 정상회의 때 스파이 프로그램이 담긴 USB를 각국 정상에 선물했다가 들쭉날쭉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미국의 사찰과 스파이 행위는 양과 질에서 다른 경쟁 국



오바마는 독일 총리 메르켈을 도청했고, 푸틴은 G20 정상들을 도청했으며, 그들은 모두 우리를 도청해 왔다.

가들을 훨씬 능가한다.

이번 일로 미국의 ‘인도주의적’ 제국주의가 실상 얼마나 비인도적이고 비민주적인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났다. 우방국 정상들뿐 아니라 수많은 민중도 이 사태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악화하는 국내 여론 때문이라도 각국 정부는 미국에 항의하는 시늉이라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인도주의적’ 제국주의

이 사건은 제국주의적 군사 개입이 커질수록 민주주의적 기본권이 위협받는다는 점을 보여 줬다. 미국 정부는 2001년 9·11 사건 이후 의회에서 ‘애국자법’을 통과시켰다. 그 덕분에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내·외국인을 영장도 없이 무려 1백만 명 이상을 체포했고 20만 명 이상을 구금했다.

NSA도 테러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애국자법을 이용해 무차별적인 개인 정보 수집에 나설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행태는 세계에서 테러를 줄여 주지도, 미국 국민을 더 안전하게 해 주지도 못했다.

전 세계의 많은 차별 피해자들은

2008년 오바마가 당선하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기대했다. 그해 오바마가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연설했을 때, 수만 명의 독일인들은 엄청난 환호를 보내 줬다. 심지어 에드워드 스노든도 오바마한테 기대를 품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기대는 곧 실망과 환멸로 바뀌었다. 오바마는 부시의 전쟁을 지속했다. 약속했던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는 계속 지연됐다.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예멘 등지에서 오바마 정부는 드론(무인기)을 이용한 공격을 강화했다. 이 때문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됐다. 오바마 정부한테는 이런 작전을 수행하는 데 NSA의 감시·정보수집 능력이 상당히 유용했을 것이다.

NSA 파문은 전 세계 민중한테 오바마도 부시와 똑같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선적인 제국주의자임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다.

경제 위기

또한 이번 일은 경제 위기 속에 자본주

의 국가들 사이에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도 보여 줬다.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는 2008년에 터진 세계경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경제 상황이 다시 악화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경제 위기가 장기화하면 자본주의 국가 간에 협력이 유지되기 어렵고, 국가 간 상대적 힘의 비중도 크게 변하면서 불안정이 커진다. 이 때문에 국가 간 지정학적·경제적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것이다.

게다가 오바마 정부는 경제 위기와 ‘테러와의 전쟁’ 실패 속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우위를 지키려 몸부림쳐 왔다. 오바마는 집권 초에 잠시 다자주의적 언사를 썼다가, 얼마 안 가 호전적이고 일방주의적 대외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갈등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국 정부에 대한 NSA의 도·감청이 더 활발해졌을 것이다.

그래서 NSA 사건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과 중국 사

이에서 중요한 정점이다.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미국은 중국 정부가 자국 정부 기관과 기업을 해킹해 군사와 산업 정보를 빼간다고 비난해 왔다.(아마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도 중국과 홍콩을 광범하게 감청하고 중국 정부의 기밀을 훔쳐 봤다는 게 드러났다.

그러나 서방 국가들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미국과 나머지 서방 국가들은 동맹 관계이고 당장에 군사적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최근 이들 사이에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가 많았고, 무엇보다 이 나라들은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경쟁적인 관계다. 그래서 NSA는 독일·일본·프랑스 등을 상대로 감청할 때 핵심 기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애썼다.

독일 정부가 미국의 도·감청을 문제 삼자, 미국 정부는 바로 독일이 수출주도형 성장모형을 채택해 세계경제의 위기를 심화시킨다고 비난하며 맞불을 냈다.

한국도 NSA의 중요한 관심 대상이었다. 2007년 1월 NSA의 ‘전략 임무 리스트’에 한국은 미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초점 지역’으로 분류돼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외교·군사 정책과 정보기관, 전략기술 등이 핵심적 정보 수집 대상이었다.

이때는 노무현 정부 말기와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르는 시기였다. 아마 미국은 당시 한미FTA, 미국산 쇠고기 협상 같은 통상 문제뿐 아니라, 북핵 문제, 이라크전 파병 등의 문제에서 한국 정부의 속내를 알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을 것이다.

이처럼 경제 위기 속에 국가들 간의 지정학적·경제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번 NSA 파문은 이 갈등이 어디까지 나아갔는지를 보여 주는 한 단면이었다.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계속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 간 갈등이 커진다면, 이런 일은 더 빈번하게 벌어지며 세계를 더 위험하게 할 것이다.

김영익

프랑스

파시스트의 약진과 인종차별에 맞선 학생들의 저항

10월 중순 프랑스 브리뇰에서 치러진 지방의회 보궐선거에서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전선(이하 FN) 후보가 승리했다. FN의 후보는 1차 투표에서 40퍼센트 이상 득표하고, 결선 투표에서는 54퍼센트를 득표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FN의 지지율이 1위가 나오기도 했다.

반면, 브리뇰에서 현직 시장을 배출하고 2011년 지방선거에서 31퍼센트를 득표한 공산당 후보는 사회당의 지지를 받았으면서도(사회당은 출마하지 않았다) 1차 투표에서 겨우 14.6퍼센트를 득표해 3위에 머물렀다.

브리뇰 선거에서 FN이 승리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좌파가 FN 성장의 토양인 인종차별에 확고히 반대하지 못했다. 프랑스에는 무슬림뿐 아니라 북아프리카 출신 이주민과 로마인* 등이 많고, 특히 브리뇰은 광산업이 아직 호황이던 1980년대까지 이주민이 많이 유입된 곳이다. 공산당 등 좌파가 인종차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에 실망한 좌파 성향의 유권자들의 투표 의욕이



추방된 학생들의 귀환을 요구하는 10월 17일 시위.

크게 떨어졌다.

둘째, 그동안 집권세력인 사회당을 지지해 온 좌파에 유권자들이 징벌적 투표를 한 것이다. 사회당은 그동안 ‘포퓰리즘’을 반대한다면서 긴축을 추진하며 유럽연합을 옹호했고, ‘극단주의’를 반대하

다며 무슬림을 탄압했다.

원래 사회당의 올랑드는 지난해 대선에서는 강력한 반긴축 정서 덕분에 당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보루인 유럽연합을 옹호하며 긴축을 추진한 것은 프랑스 대중의 염원에 대한 배신이었다. 2005년 유럽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다수 나왔을 정도로 프랑스에서는 유럽연합에 대한 반감이 크다. 공산당은 이런 사회당의 공무니를 쫓았다.

희망

그러나 희망도 있다. 최근 프랑스 정부의 인종차별적 강제추방 정책에 항의해 프랑스 학생들이 벌인 강력한 시위가 그 희망을 보여 준다.

본지(114호)가 보도했듯, 10월 중순 프랑스 정부가 이주민 학생 두 명을 강제 추방하자 프랑스 학생들은 학교를 점거하며 강력하게 항의 시위를 벌였다. 중등학교 수십 곳에서 점거 투쟁이 시작된 10월 17일에는 파리에서만 7천 명이 거리 행진을 벌였다.

프랑스 정부는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

로 올해 상반기에만 로마인을 1만 명 이상 강제 추방했다. 이번엔 이주민 학생들을 강제 추방한 것도 이런 인종차별적 정책의 일환이었다. 특히 강제추방된 학생 중 한 명은 통학버스 안에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끌려갔다. 정부의 이런 반인권적 행위는 학생들의 분노를 더 자극했다.

학생들의 강력한 반발에 올랑드는 추방된 학생 중 한 명의 귀국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돌아올 수 없다고 해 빈축을 샀다.

프랑스 학생들에게는 위대한 투쟁 전통이 있다.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결합되며 프랑스 사회를 혁명 직전 단계까지 몰아붙였던 1968년 항쟁을 촉발했고, 2006년에는 악질적 신자유주의 정책인 최고고용계약법(CPE)*의 도입을 저지하기도 했다.

이주민 학생 강제추방에 맞선 프랑스 학생들의 시위는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에 강력한 반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리고 이 반대 운동은 인종차별을 먹고 자라는 파시즘에 대한 간접적인 반대이기도 했다.

차승일

로마인 관련 추천 영화

〈집시의 시간〉, 에미르 쿠스트리차, 1989
〈내 사랑 안젤로〉, 로버트 듀발, 1983

로마인

유럽(주로 중부 유럽과 동유럽)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 예전에는 ‘집시’라고 불렸다. ‘집시’라는 용어는 요즘에는 경멸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본다.

최초고용계약법(CPE)

2006년 프랑스 총리 도미니크 드 빌랭이 도입하려 한 것으로 26세 미만 청년 노동자들에 대해 채용 후 2년 안에는 적법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었다.

철도 - 임금 동결, 인력 감축, 현장 통제 강화

구조조정에 맞선 현장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가 '2015년 후자 전환'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그는 "복사지 한 장도 아껴야 한다"며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1천억 원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는데,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중요하게 포함됐다.

이미 철도공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적자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특히 내년 임금을 동결하고, 임금 인상 효과를 내는 자동근속승진제도 폐지하려 한다. 물가 인상을 고려하면 실질 임금 삭감인 셈이다.

심지어 사측은 최근 인건비를 더 줄이겠다며 '시간외 근무, 대체근무 금지' 지침을 내렸다. 이는 업무량은 그대로 두고 시간만 줄여, 수당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고양의 KTX 정비 부문(차량)에서 지부장 농성과 집회 등 투쟁이 시작됐고, 서울지역의 차량지부들도 조만간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고양차량지부의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인력이 너무 부족해 시간외 근무로 그나마 간신히 차량 검수를 해왔다. 그런데 이번 조치 때문에 검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판이다. 인력충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역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불만이 높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최명호 국장은 "이미 인력을 감축해 교차 두 명이 근무하는 역들이 많은데, 누가 병가나 휴가라도 내면 한 명이 전체 업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 측은 올해에만 두 차레나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무산된 중앙선 여객열차, 화물열차의 1인 승무도 다시 추진하려 한다. 이와 함께 정년 퇴직에 따른 인력 부족을 방치하는 방식으로 전체 정원을 1천1백 명 줄이겠다고 한다.

공사 측은 내년 신규채용의 10퍼센트를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는 등 노동



구조조정은 민영화의 핵심 효과 중 하나다 10월 26일 철도·KTX 민영화 반대 3차 범국민대회.

유연화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모든 점들은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최연혜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최연혜는 안전에 관해서는 "0.01퍼센트 실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고 발생시 무조건 직위해제하는 '원스 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인력 부족과 비정규직 확대야말로 그간 빚어진 각종 사고의 주범 중 하나다.

일벌백계

무엇보다 일벌백계식 초저는 노동자들을 위축시켜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이기만 할 것이다. 이는 이미 2012년에 철도공사 측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휴먼에러조사위원회'가 지적한 바이기도 하다. 이 위원회는 안전을 위해 징계 등 처벌에 의존하지 말고, 기관사들의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안전 설비·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철도노조 박홍수 정책팀장에 따르면, 실제

로 노르웨이에서는 노동자 개인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전제로 안전 시스템을 개편해 효과를 봤다.

따라서 지금 최연혜가 '안전 확립' 운운하며 현장 통제를 강화하는 진정한 목적은,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임금·노동조건에 대한 공격을 수월하게 하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최연혜가 추진하는 일련의 공격들은 바로 정부가 민영화를 통해 내려는 효과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최연혜의 구조조정과 현장 통제 강화에 맞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 철도 노동자들의 경험을 반면 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1986년 말 철도 민영화에 앞서 집중적으로 근무기강 잡기에 나서며, 노동조건 후퇴, 비정규직 확대, 사무소 통폐합과 지방선 폐지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그런데, 당시 노조들은 이에 효과적으로 맞서지 못했다. 이는 민영화 반대 투쟁도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냈다.

따라서 민영화 반대 파업을 힘있게 조직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벌어지거나 예고되는 구조조정과 현장 통제에 맞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특히 직종별 노동조건 등의 차이 때문에 대응도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 노조 전체 차원의 대응을 조직해 노동자들의 투지와 사기를 끌어 올려야 한다.

이정원

철도 기관사가 민영화의 민낯을 폭로하다



《철도의 눈물》 박홍수 지음, 후마니타스 244쪽, 13,000원

기차가 출입문 고장으로 멈춰 섰다. 승객은 근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직원은 미안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건 저희 회사 일이 아닙니다." 독일 마인츠 역에서 생긴 일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라는 카드를 꺼낼 때마다 들이치는 핵심 논거는 효율성이다. 막대한 적자를 해결하려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효율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철도의 눈물》 저자인 박홍수 동지는 18년간 열차를 운전해 온 철도 기관사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효율성'이라는 거짓 환상으로 뒤덮여 있는 철도 민영화의 민낯을 폭로하고, 그것이 가져올 비극을 경고한다.

저자는 대구 열차 사고 등 여러 사례를 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전 문제를 '장기적 고려 대상'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저들이 얘기하는 '효율성'이라고 고발한다. 적자를 구실로 1인 승무 확산, 인력감축 등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민영화를 추진하는 진정한 목적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기업에 새로운 돈벌이 창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저자는 서울지하철 9호선의 실상이 '이와 같은 민영화의 참혹한 미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며 민영화는 '사회 양극화를 더 촉진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사람보다 이윤이 먼저인 자본주의 체제는 끊임없이 악성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99퍼센트 노동자·민중이다. 저자가 책을 맺으며 말한 것처럼, 철도를 자본의 수익 창구로 만들어 버리려는 저들에게 철도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삐 풀린 자본주의와 그 안의 바이러스들을 향해 도전해야 한다.

민영화 저지 투쟁은 전체 노동계급의 삶을 위한 투쟁이다. 정부의 위선과 민영화의 폐해를 잘 설명하는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박혜신

최연혜, KTX 법인 분리 반대?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의지는 여전히 강력하다

철도공사 신입 사장 최연혜가 최근 "먼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정부에] 건의할 것은 당당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 확고한 긴축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수서발 KTX 법인 분리에는 반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내심 KTX 민영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취임 직후부터 수서발 KTX 민영화에 열을 올린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거듭 '연내에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밝혔고, 최근에도 '12월 초까지 철도공사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신설 법인의 출자를 결의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최연혜가 당선하자마자 '정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경영계약서에 사인하라고도 주문했다. 최연혜는 두 달 내에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정부가 KTX 민영화를 강력히 추진하려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

정부는 수서발 KTX와 같은 덩치 큰 핵심 간선을 민영화해 철도산업 전반에 수익 경쟁, 비용절감 등 시장개혁의 효과를 높이고, 이를 지렛대 삼아 공공부

문 전체에 신자유주의 구조개편을 확대하려 한다.

또 이 사업에 군침 흘리는 재벌·기업주들에게 안정적 수익처도 보장해 주고자 한다. 그래서 수서발 KTX 민영화는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에서도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최연혜가 이런 정부를 완전히 거스를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특히 최연혜는 민영화 자체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철도공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견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즉, 요금 인상, 인력감축, 공공서비스 후퇴 등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철도공사 경영진으로서 수서발 KTX 같은 알짜배기 흑자 노선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경쟁력' 확보

게다가 최연혜는 지방 적자선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도, 그저 '검토한 바 없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사실 최연혜가 강력하게 의지를 드러낸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안 그래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 온 지방 '적자선'은 팔아치우거나 용도 폐기할 개연성이 높다. 철도공사 측은 이미 최연혜 취임

전에 8개 적자선 민영화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바도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결국 최연혜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철도공사 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사실 이는 그간 철도공사 측이 추구해 온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철도노조가 옹계 지적했듯, 철도공사의 초기 지분이 얼마가 되든 이는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다. 법인이 분리되면, 여기서 벌어들이 수익으로 적자 노선을 지원할 수 없게 되고, 나머지 사업 분야들에서 요금 인상, 투자 축소, 구조조정 확대 등의 압력도 가중시킬 것이다.

무엇보다 최연혜는 지금 전방위적 구조조정을 천명하며 철도공사 내부에서 체계적인 시장화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인건비 40퍼센트 경감" 등을 내세우며 실질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 등에 팔을 걷어붙이고, 1인 승무제 등 인력 감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공격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뿐 아니라, 안전 사고 위험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킬 것이다. 시장화와 민영화 사이에는 만리장

성이 있는 게 아니다.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이 중요한 이유다.

따라서 철도노조 활동가들은 현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공격에 맞서며 12월 예고한 민영화 반대 파업 등 투쟁 조직에 힘을 쏟아야 한다.

박설

추천 소책자



철도 민영화 반대 시리즈 2 철도 민영화, 재앙을 향한 탈선—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박설, 이정원 외 지음, 노동자연대다함께, 3,500원

구입 문의

02)2271-2395, 010-8908-7912

※ 20권 이상 구입시 20퍼센트 할인



《레프트21》 철도 민영화 반대 특별 페이지

요금 인상, 대형 참사, 인력 감축 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http://left21.com/nosale>

삼성전자서비스 위영일 지회장 인터뷰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삼성 왕국’에 맞서 투쟁합시다”

삼성의 악랄한 노조 탄압이 또다시 한 젊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10월 31일 급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종범 조합원이 노조 탄압에 벼랑 끝에 내몰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위영일 지회장이 이 비극의 진정한 원인과 삼성에 맞선 투쟁을 말한다. 위영일 지회장이 최종범 열사를 생각하며 직접 쓴 시도 함께 읽는다.



최종범 열사는 지회 창립 초기부터 함께한 삶의 강렬한 욕구를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노조에 가입했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던진 것을 보면 삼성에 대한 벽, 정부에 대한 벽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삼성 면죄부에 절망을 느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이 보란 듯이 노조 탄압을 자행하자 삶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있던 젊은이가 결국은 삶의 끈을 놓으면서까지 세상에 알려 달라고 유서에 남기고 자신의 뜻을 이어받아 끝까지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 사장이제근은 도의적 사과는커녕 열사의 죽음을 왜곡하고 저급하고 비열한 술수를 쓰고 있어요. 최종범 열사가 월 5백5만 원의 고임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살’은 개인적 문제가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최종범 열사는 9월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밤 10시~11시까지 일했어요. 5백5만 원은 자재비, 고객에게 못 받은 돈,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된 겁니다.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장은 충분히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삼성의 임금 체계는 대한민국 법에서 정한 상식을 뛰어넘고 있어요. 노동법상에는 시급이나 월급이나 연봉으로 임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기본급은 하나도 없이 건당 수수료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성수기인 6, 7, 8월에만 몸이 부서져라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만 돈을 벌 수 있어요, 몸이 망가져도 새벽 1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수기에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1백만 원도 못 받아 갑니다. 포항의 한 대의원은 81만 원을 받았어요. 기름값, 통신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겨우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월세가 30만 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소리죠. 카드도 끊기고 기름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초일류 글로벌기업 삼성에서 민초들이 겪는 삶의 현장입니다.

불법파견뿐 아니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도 위반하고 있는 삼성을 비호하고 있는 게 바로 박근혜 정부입니다.



탄압을 이겨내며 조직을 건설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의 출범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7월 14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출범식.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러 현장에 왔을 때, 한 조합원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제기하니까 자신은 불법파견 조사하러 왔지 근로기준법 위반 조사하러 온 건 아니라며 발뺌했어요. 길거리에서 강도를 당해 경찰을 불렀더니 “나는 교통과지 수사과가 아니다”며 모른 척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자본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삼성의 노사전략 문건에는 노조가 설립 시에 채증과 표적감사 등을 통해 노조원을 탈퇴시키고, 분란을 조장해 이탈시켜 노조를 와해시켜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교섭을 최대한 지연시키라는 내용도 있고요, 삼성의 무노조 경영 전략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에서도 표적감사와 일감 빼앗기 등의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열사도 표적감사의 대상이었습니다.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투쟁합시다.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겁니다. 더 이상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죽지 않게 말입니다.

삼성에 맞서려면 조합원들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삼성이라는 왕국에 맞서 민란을 일으켰습니다. 구경만 하지 말고, 응원만 하지 말고 연대의 손길을 보내 주세요.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노동자, 사회단체, 정당 가릴 것 없이 한 마음 한뜻으로 싸웁시다.

인터뷰·정리 강철구

아! 하늘아, 잿빛 하늘아!
더 이상 빛깔 고운 푸르름을 내지마래!
이 땅의 비정규 설움으로 내동댕이쳐,
모가지 터져라 우는 피물음으로
그렇게 또 그렇게
잿빛 하늘이 되어래!
열사의 넋이 그 한을 풀기 전
너 하늘아
다시는 푸르름을 내지마래!
우리의 소망이 분노가 되어
이 설움의 땅 위를 훨훨 날아오르기 전까지
너는 그래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서울대병원 파업

미래의 투쟁을 위해 곱씹어봐야 할 것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산하 서울대병원 분회가 파업 13일 만에 병원 측과 합의안을 체결하고 복귀했다. 조합원의 78퍼센트가 투표해 그중 83.4퍼센트가 합의안을 지지했다. 전체 조합원의 65퍼센트가 지지한 셈이지만, 90.3퍼센트가 투표에 참여해 94퍼센트가 지지한(전체 조합원의 85퍼센트) 파업 찬반투표에 견주면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노동조합 지도부는 병원 측의 임금동결 방침과 단협상 각종 휴일 폐지, 수당 삭감 시도를 막아 내고 2.8퍼센트의 임금 인상을 쟁취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2.8퍼센트는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다. 무기계약직 2백여 명 가운데 1백 명을 2014년까지 정규직화하기로 했고, 모호한 표현으로나마 병원 측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문구가 합의안에 포함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 진료비 감면제 축소는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6년 만에 파업을 해 어느 정도 소득을 얻은 셈이다. 특히, 병원은 업무에 따라 최대 1백 퍼센트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돼 파업권에 커다란 제약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1987년 이래 병원 노동자들의 말인니 구실을 해온 서울대병원 노동자들도 2008년에 이 제도가 도입된 뒤 파업 한 번 해 보지 못했고, 그 결과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지키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도 조합원 1천5백 명 중 최대 5백 명만 합법적으로 일손을 놓을 수 있었다. 간호부 등 병원의 핵심 업무를 담당한 노동자들이 대부분 불참해야 해서 파업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처럼 불리한 조건임에도 조합원의 94퍼센트가 파업 찬성표를 던진 것은 노동자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 준 것이었다. 2008년 경제 위기 직후에는 임금이 동결되기도 했고, 지난 몇 해 동안에도 임금 등 노동조건이 악화돼 더는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이다.

게다가 올해 초 새로 취임한 병원장 오병희는 병원 적자를 이유로 ‘비상 경영’을 선포하며 노동자들에게 임금 동결 등 양보를 요구했다.

따라서 파업 참가자들이 ‘어쨌든 파업에 나섰으니 이 정도라도 얻어낼 수 있겠다’며 일부 아쉬워하면서도 합의안을 받아들인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필수유지업무가 없던 시절 만큼은 아니어도 파업이 일정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1백40여 명이 노동조합에 새로 가입하기도 했다.

소득

이 파업의 효과는 전체 계급투쟁 상황과 맞물린 덕분에 그 자체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서 새로운 폭로가 이어지며 박근혜 정부가 불리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정부의 시정명령에 맞서 거부 입장을 밝히며 노동자 운동의 자존심을 지켜냈고 이는 다소 억눌려 있던 노동계급 전체의 사기를 높이는 구실을 했다.

또한 박근혜 취임 직후 시작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투쟁은 공공의료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였고 이는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에도 우호적인 분

위기를 만들어 줬다.

노동자들을 무릎 꿇려 한 병원장 오병희는 되레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 파업 1주일이 넘도록 협상을 거부하던 오병희는 국정감사에서 집중 포화를 맞은 이탈날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정치 상황 속에서 서울대병원 노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전체 정치 상황과 서울대병원노조가 가지는 상징성, 그리고 파업 찬반 투표에서 드러난 노동자들의 불만 등을 고려하면 약간의 아쉬움도 남는다.

먼저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2.8퍼센트는 치솟는 전셋값 등 물가 인상을 고려하면 전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합의안을 두고 “노사는 이날 임금 정률의 1.3퍼센트 인상과 정액 1만 5천 원 인상에 합의했다”며 비교적 문제 없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이 결과가 다른 병원 노동자들에게 끼칠 영향은 작지 않다.

민주노총도 경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악화된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8.9퍼센트(평균 임금 기준 21만 9천8백13원)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도 20만 9천 원 인상을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지도부도 공식적으로는 13.7퍼센트 인상을 요구했다. 다른 국립대병원이나 보건의료노조의 임금협상 결과(2.8퍼센트 안팎)를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목표였지만, 스스로 그 수준을 요구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었던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의 임금 등 노동조건은 지난 몇 년 동안 악화했고 노동강도는 세졌다. 오죽하면 많은 간호사들이 2~3년 만에 직장을 떠나겠는가. 다른 부서의 대의원들도 대부분 파업 기간에 이런 고통을 호소했다.

말인니

그럼에도 적잖은 조합원들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을 비난하는 정부와 주류 언론, 그리고 이런 비난에 맞서기보다 동조하는 자유주의자들과 온건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주장에 주눅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야 다른 병원 노동자들도 그만큼 요구하며 싸울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복지제도를 예로 들며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다. ‘철밥통’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다른 노동자들의 밥그릇을 뺏기는커녕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파업 기간 내내 임금인상 요구를 전면에는 건 단체는 노동자연대다함께뿐이었다. 한 노동자는 이런 주장을 듣고 “웬조러들이 있었는데 어깨를 펴 수 있게 해줬다”며 고마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비춰 보면 노조 집행부가 파업 기간 내내 임금인상 요구를 전면에는 내세우지 않으려 한 점은 아쉬운 점이었다. 파업 현장 곳곳에 내걸린 조합원들의 메모에도 임금인상 요구가 두드러졌는데, 이를 그쳐 여러 가지 요구 중 하나 수준으로 격하시킨 것은 민주적이지 못한 처사였다. 노조 집행부는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한 조합원들의 견해를 그

저 일축해선 안 된다.

또 많은 조합원들이 파업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과 경제 상황, 다른 병원의 임금협상 등을 떠올리며 복잡한 심경 속에서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다.

노조 지도부가 가장 강조한 공공의료 요구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얻어 내지 못한 점도 아쉽다. 아마도 많은 조합원들이 이 문제 때문에 찢찢함을 느꼈을 듯하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노조가 제시한 공공의료 요구를 실제로 쟁취하려면 진주의료원의 사례처럼 전국적 수준에서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했다.

그러려면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 요구 같은 조합원들의 즉각적 요구를 뭔가 땀땀하지 못한 것처럼 부끄러워해서는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전투성을 끌어올리기 어렵다.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 문제를 수줍게 여겨 후퇴하면서 진주의료원 투쟁의 동력이 한때 약화된 것은 반면교사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임금 등 경제적 요구를 부차화시킨 것은 공공의료 요구를 쟁취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필자의 평가가 이번 서울대병원 투쟁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만, 여론 — 본질적으로 사용자들의 가치관을 벗어나지 않는다 — 에 주눅 들어 투쟁 참가자 대다수의 자신감과 투쟁성, 대의명분에 대한 확신 등을 충분히 끌어낼 줄 모른다면, 미래에는 불필요한 후퇴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노동운동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자 함이다.

장호중

대기업·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지할

전지윤

〈레프트21〉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조직 노동자들(이하 대기업 조직 노동자)이 임금 인상 등 해당 부문 공유의 요구들을 위한 투쟁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더 넓은 정치적 문제들과 차별받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위해서도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 등에 대한 분명한 지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

〈레프트21〉과 대조적으로,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등 경제적 요구들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해가 갈수록 듣기 힘들어지고 있다. 당장 올해 현대차·노조의 입단투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별로 없었다.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을 가장 앞장서서 비난하는 것은 우파다. 우파는 "대기업 노조는 기득권층이며 이들의 투쟁은 나머지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문제는 이런 주장을 꽤 많은 노동운동가들이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조직된 대공장 노동자들의 투쟁도 더 이상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권리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조건준, <아빠는 현급 인출기가 아니냐>)

심지어 급진좌파조차 비슷한 주장을 한다.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투쟁은 … 오히려 격차를 더 벌리게 되고 차별을 확대하게 됐다."(정윤광, <워기의 노동운동 더 아래로, 더 왼쪽으로>)

"대기업 노조의 임금 인상을 통해" … 전체 산업의 임금 인상이라는 부수 효과를 사라고도 도리어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만다."(사회진보연대, <자본주의 위기와 노동자운동 -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런 주장은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 경제적 요구들을 자제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몫을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기 쉽다.

실제로 몇 년 전 진보정당 일부에서 '사회연대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대기업 노동자 양보론'이 제안된 바 있다. 최근에도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는 "복지를 위해서는 고임금 노동자들이 세금 더 내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의 양보와 자제를 촉구하는 주장은 투쟁과 연대 건설보다는 협상을 통해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조 고위 간부층에게 솔깃한 얘기일 것이다.

이는 노동정치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주장과도 연결된다. 예컨대 노화한 전 정의당 의원은 "우리가"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의 철발통을 지켜 주는 무리로 비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봐야 한다"며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으로 지지 계층 확장'을 말했다.

과연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소기업의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하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과의 격차를 벌리기만 하게 됐는가?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첫째,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그 성과는 명백히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 사용자

친화적 입장에서 고용관계를 다루는 노사관계론에서도 이것을 "노동조합의 위협 효과"라고 설명한다. '노조 비조직 부문의 사용자가 잠재 위협에 대비해 노조 조직 부문의 임금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비조직 부문의 임금을 인상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금속 산업에서 이것이 뚜렷하다. 대기업 원청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타결 수준이 중소 하청기업 노동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과연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소기업의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하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과의 격차를 벌리기만 하게 됐는가?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첫째,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그 성과는 명백히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 사용자

진정한 문제

대기업 사측이 굳이 기본급이 아니라 각종 수당 형태로 임금을 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명목 인상률이라도 낮게 해서 다른 기업들에 끼치는 임금 인상 도미

노 효과를 줄이려는 것이다.

결국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의 선도적 투쟁은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을 끌어올리는 구실을 한다. 반면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위한 투쟁을 자제하면 역효과가 난다.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들이 뭇가 요구하거나 투쟁하기 더 어려워진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상황이 이것을 잘 보여 줬다. 2008년 위기 이후 5년 동안 '다들 먹고살기 힘든데 대기업 노조가 배부를 요구와 투쟁을 하면 안 된다'는 압박이 매우 컸다. 이 속에서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요구를 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자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 악화했다.

그래서 2007년 4분기부터 지난 5년 동안 전체 상용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2.3퍼센트나 하락했다. 1997~2002년 여기에 있다. 명목 인상률이라도 낮게 해서 다른 기업들에 끼치는 임금 인상 도미

도록,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나 상대적 고임금은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들의 몫을 줄이거나 거기서 빼앗아 온 것이 아니다.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의 상대적 고임금은 노동생산성을 반영한 것이다.

일자리가 안정돼 있고 숙련된 대기업 노동자들은 생산성이 높다. "자본은 이런 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양보할 각오가 돼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이 노동자들에게서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크리스 하먼, <세계화와 노동계급>)

실제로, 생산된 부에서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대기업일수록 오히려 낮다.(5백대 기업에서는 53.7퍼센트, 1백대 기업에서는 52.1퍼센트, 20대 기업에서는 49.9퍼센트)

셋째, 진정한 문제는 노동자 계급 내부의 격차보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격차다. 이것은 2008년 경제 위기를 거

의미가 없는가

레프트21 | 제115호

치며 계속 확대돼 왔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자 몫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2006년 61.3퍼센트, 2009년 60.6퍼센트, 2011년 59.5퍼센트로 감소했다.

잠재력

〈매일노동뉴스〉가 최근 한 대기업 내부의 임금을 비교한 것도 보자. 이 대기업에서 한 생산직 노동자의 연봉은 6천6백79만 원. 동기이사의 연봉은 22억 9천만 원. 회장의 연봉은 69억 원이었다. 이런 격차야말로 진정한 문제이다.

물론 대기업 조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 사이에 격차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쟁점은 노동 유무별 임금 격차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투쟁하면 효과적으로 임금을 올릴 수 있지만, 노조가 없으면 그러기 힘들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이다.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과 해고 등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더 어렵다.

결국 격차를 만든 지배자들이, 격차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셈이다. 경비가 허술한 앞동네가 경비가 철저한 뒷동네와 달리 도둑·강도 피해를 당했다면 그 책임은 뒷동네에 있지 않다. 책임은 앞동네를 털어간 도둑·강도에게 있다. 대안은 앞동네에도 경비(노동조합)를 세우고, 뒷동네와 힘을 합쳐 도둑·강도를 몰아내는 것이다.

국내 20개 대기업 집단의 자산총액은 2008년 6백77조 원에서 2012년 1천2백3조 원으로 폭증했다. 이걸 놔두고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이 양보와 자제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더 나은 조건을 쟁취하는 것을 오히려 지지·고무해야 한다.

특히, 수출 대기업과 주요 공공부문

에서 잘 조직돼 있는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들은 한국 자본주의 최대 이윤 원천에 강한 타격을 가할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 선박 등 5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0퍼센트에 달한다.

특히,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은 자신감과 조직이 강해지고, 정치적 시야도 트인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레프트21〉독자들은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이 경제주의를 뛰어넘어 더 넓은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더 열악한 노동자들과 연대하도록 그들의 자신감을 북돋워야 한다.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들도 이런 투쟁에 자각받아 노조 건설과 투쟁에 나서도록 말이다.

제1차세계대전 종전 직후에 페테르스부르크, 베를린, 토리노 등지에서 혁명적 투쟁에 앞장서며 제국주의 전쟁을 종식시켰던 것도 바로 대규모 산업의 조직된 노동자들이었다.

‘노동귀족론’이 먹히는 이유와 진정한 대안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의 경제적 투쟁을 꺾아내려는 흔한 주장은 조중동과 기득권 세력이 애호하는 '노동귀족론'이다. 문제는 노동 대중 속에서, 심지어 급진좌파 속에서조차 이런 주장이 꽤 만연하다는 점이다.

이는 대기업 노조가 더 열악한 노동자들의 문제를 외면하는 일이 실제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해 가이차 광주 공장에서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했을 때 정규직 노조의 연극은 미흡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속에서는 '정규직이 분신했면 이랬겠다. 즉각 라인을 세웠을 것'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대기업 노조는 자기 밥그릇만 챙기지도 않으면서 열악한 노동자들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냉소가 자라 왔다.

그러나 이는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이 실제로 기득권층이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그보다는

대기업 노조 집행부 고위 간부들의 관료적 소심성과 보수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임 상근자로서 이들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중재를 전문으로 하면서 투쟁보다는 협상·타협에 치중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비정규직의 희생을 '주요' 정규직 조합원의 이익을 '받으려'는 태도도 나타나게 된다. 즉, '노조 고위 간부층의 관료주의'가 문제의 핵심이다.

관료주의

얼마전까지 현대중공업의 친사측 노조 지도부의 태도가 이것의 전형이었다. 정부와 보수 언론은 이런 노조 지도자들을 오히려 '합리적 노동운동'가로 칭찬해 왔다.

물론 대기업 노조 평조함원들이 이런 지도부를 거스를 자신감이 없어서, 비정규직이 구조조정의 방패막

이라는 지도자들의 논리에 종종 휘둘린다.

그러나 이처럼 노동자들이 분열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의 조건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금속노조 조합원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9명의 노동자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2010년 현대차 전주공장의 정규직 노조 집행부는 비정규직 노조 투쟁을 확고하게 지지해 <한겨레> 등의 신문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다.

따라서 투사들은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등 처지가 더 나쁜 노동자들과 연대해 투쟁하도록 개입해야 한다. 노조 지도부가 이런 과제를 외면할 때는 독자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투쟁이 쌓여나갈 때 '노동귀족론'이 설 자리는 사라질 수 있다.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통상임금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서 훔쳐간 ‘장물’이다

최미진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1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공개변론 후에도 그동안 노동자들이 빼앗긴 통상임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시작했다. 그러나 통상임금 소송으로 붙겨진 논쟁 속에는 다른 중요한 쟁점들도 있다. 통상임금 논쟁의 배경에는 임금 체계와 노동시간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통상임금은 시간의·야간·휴일근로 등 법정 노동시간 외 초과노동의 가산임금 산정 기준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본가들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최대한 좁게 해석해, 저임으로 초과노동을 시키려 한다. 반면, 노동자들은 그동안 여러 소송과 투쟁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점

점 더 넓게 인정받아 왔다.

자본가들은 기본급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기형적인 방식으로 조개 냈다. 기본급 비중을 최대한 줄이고 대신 각종 상여금과 수당 등을 지급하는 임금 체계를 만들어 온 것이다. 그래서 현대차 등 완성차 노동자들의 평균 기본급은 1백50만 원가량밖에 안 된다. 현대차 노동자의 경우 기본급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퍼센트밖에 안 된다. 반면 수당의 종류는 무려 40여 개나 된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자본가들은 마땅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고 그 결과 법정 노동시간 동안의 시간당 임금보다 초과 노동시간 동안의 시간당 임금이 더 적게 됐다.

근로기준법 56조의 취지 —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초과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초과근로를 시킬 때는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 — 를 무시하고 있다. 애초에 사법부가 통상임금 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긴 이유는 통상임금을 폭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였다. 박근혜 자신이 GM 회장을 만난 뒤 이런 신호를 줬다.

한편, 자본가 계급은 국가기관들을 이용해 이 소송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 한다. 애초에 사법부가 통상임금 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긴 이유는 통상임금을 폭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였다. 박근혜 자신이 GM 회장을 만난 뒤 이런 신호를 줬다.

한편, 자본가 계급은 국가기관들을 이용해 이 소송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 한다. 애초에 사법부가 통상임금 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긴 이유는 통상임금을 폭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였다. 박근혜 자신이 GM 회장을 만난 뒤 이런 신호를 줬다.

따라서 통상임금 판결은 본질적으로

로 높아야 하고, 불안정한 시급제가 아니라 월급제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통상임금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지금이 임금 체계 개편과 노동조건도 지불하지 않은 '장물'이다.

이런 기형적 임금 체계 때문에 노동자들은 낮은 기본급으로 생활할 수 없어서 연장, 휴일, 특근 등 초과노동을 하느라 동공이 뻗힐 지경이었다.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은 건강한 삶과 스스로 생각하고 정치 활동을 할 여류를 뜻한다. 이런 시간이 확보되어야 소비의 효과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기본급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수당을 없애기 위해 고정적인 수당과 상여금 등을 없애 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 판결은 본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나올 수 있다. 물론 그동안 굳어진 판례를 뒤집는 것은 사법부에게도 부담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설사 판례가 뒤집히지 않더라도 모호한 판결과 나와, 기업주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법망의 구멍을 찾는 공수를 쓰거나 임금 체제나 노동조건 개악을 시도하려 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와 경총은 통상임금 논쟁을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근속기간에 따라 해마다 임금이 인상되는 연공급제를 성과급제로 전환해 노동자들에게 성과를 내도록 압박하고 임금을 깎으려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주들은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기준인 정규직 노동자들을 없애기 위해 고정적인 수당과 상여금 등을 없애 버릴 수도 있다.

의미가 없는가

치며 계속 확대돼 왔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자 몫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2006년 61.3퍼센트, 2009년 60.6퍼센트, 2011년 59.5퍼센트로 감소했다.

잠재력

〈매일노동뉴스〉가 최근 한 대기업 내부의 임금을 비교한 것도 보자. 이 대기업에서 한 생산직 노동자의 연봉은 6천6백79만 원. 동기이사의 연봉은 22억 9천만 원. 회장의 연봉은 69억 원이었다. 이런 격차야말로 진정한 문제이다.

물론 대기업 조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 사이에 격차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쟁점은 노동 유무별 임금 격차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투쟁하면 효과적으로 임금을 올릴 수 있지만, 노조가 없으면 그러기 힘들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이다.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과 해고 등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더 어렵다.

결국 격차를 만든 지배자들이, 격차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셈이다. 경비가 허술한 앞동네가 경비가 철저한 뒷동네와 달리 도둑·강도 피해를 당했다면 그 책임은 뒷동네에 있지 않다. 책임은 앞동네를 털어간 도둑·강도에게 있다. 대안은 앞동네에도 경비(노동조합)를 세우고, 뒷동네와 힘을 합쳐 도둑·강도를 몰아내는 것이다.

국내 20개 대기업 집단의 자산총액은 2008년 6백77조 원에서 2012년 1천2백3조 원으로 폭증했다. 이걸 놔두고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이 양보와 자제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더 나은 조건을 쟁취하는 것을 오히려 지지·고무해야 한다.

특히, 수출 대기업과 주요 공공부문

에서 잘 조직돼 있는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들은 한국 자본주의 최대 이윤 원천에 강한 타격을 가할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 선박 등 5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0퍼센트에 달한다.

특히,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은 자신감과 조직이 강해지고, 정치적 시야도 트인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레프트21〉독자들은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이 경제주의를 뛰어넘어 더 넓은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더 열악한 노동자들과 연대하도록 그들의 자신감을 북돋워야 한다.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들도 이런 투쟁에 자각받아 노조 건설과 투쟁에 나서도록 말이다.

제1차세계대전 종전 직후에 페테르스부르크, 베를린, 토리노 등지에서 혁명적 투쟁에 앞장서며 제국주의 전쟁을 종식시켰던 것도 바로 대규모 산업의 조직된 노동자들이었다.

1만 원 수당 인상이 “좋은 일자리”?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하고 처우 개선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하고,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랬

다던 박근혜 정부의 약속이 사기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처우에 관한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하며 학교비정규직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었

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정부의 안

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1년 이상 근무한 학교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다. 호봉·성과급 등 모든 조건이 정규직에 훨씬 못 미치는데다 고용 불안조차 완전하게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충남교육감은 ‘무기계약직도 해고할 수 있다’며 노동자들

을 협박하고 있다. 이조차 언어회화전문

문강사, 시간제 노동자 등 2만여 명은 아

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고용 불안에 시

달려야 한다.

게다가 교육감 직접 고용, 월급제 시행 등도 교육감들의 무성의한 태도와 불투명한 예산 확보 때문에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인 호

봉제 도입에 대해 정부는 계속 어렵다는

이유기만 하고 있다. 1년을 일하면 10년

을 일하는 같은 임금을 받는 현재 임금제

계로는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임금차

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

부는 최소 3만 원 수준의 호봉제를 요구

하는 노동자들에게 고작 장기근속가산금

1만 원을 인상하겠다는 안을 내냈다. 정

부안으로는 10년 차 노동자들의 임금 인

상액이 고작 4만 원밖에 안 된다.

게다가 장기근속가산금은 3년 미만의

노동자들은 받을 수 없고, 상한제도 있어

오래 일한 노동자들은 더는 임금이 올라가

지도 않는다. 또한 장기근속가산금은 통상

임금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해석 때문

에 각종 수당을 책정할 때도 손해를 본다.

따라서 폐지화된 장기근속가산금이 아

니라 제대로 된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것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평생 같

은 임금을 받고 일할 것을 강요받는 수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정의로은 요구다.

경제 위기가 깊어지면서 노동자 쥐어

짜기에 열안이 된 박근혜 정부가 알아서

몰려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노동부 산하의 무기계약

직,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에 산 반영을 거부하기도 했다. 따라서 강력

한 투쟁이 뒷받침될 때 정부의 양보를 강

제할 수 있다.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예산

이 다뤄지는 11월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때 전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

일하게 파업에 돌입하는 게 효과적인 것

이다. 노동자들이 진정한 힘을 보여 줄 때

교육감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거의 진

을올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인 호

봉제 도입에 대해 정부는 계속 어렵다는

이유기만 하고 있다. 1년을 일하면 10년

을 일하는 같은 임금을 받는 현재 임금제

계로는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임금차

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

부는 최소 3만 원 수준의 호봉제를 요구

하는 노동자들에게 고작 장기근속가산금

1만 원을 인상하겠다는 안을 내냈다. 정

부안으로는 10년 차 노동자들의 임금 인

상액이 고작 4만 원밖에 안 된다.

게다가 장기근속가산금은 3년 미만의

노동자들은 받을 수 없고, 상한제도 있어

오래 일한 노동자들은 더는 임금이 올라가

지도 않는다. 또한 장기근속가산금은 통상

임금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해석 때문

에 각종 수당을 책정할 때도 손해를 본다.

따라서 폐지화된 장기근속가산금이 아

니라 제대로 된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것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평생 같

은 임금을 받고 일할 것을 강요받는 수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정의로은 요구다.

경제 위기가 깊어지면서 노동자 쥐어

짜기에 열안이 된 박근혜 정부가 알아서

몰려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노동부 산하의 무기계약

직,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에 산 반영을 거부하기도 했다. 따라서 강력

한 투쟁이 뒷받침될 때 정부의 양보를 강

제할 수 있다.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예산

이 다뤄지는 11월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때 전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

일하게 파업에 돌입하는 게 효과적인 것

이다. 노동자들이 진정한 힘을 보여 줄 때

교육감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거의 진

을올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인 호

봉제 도입에 대해 정부는 계속 어렵다는

이유기만 하고 있다. 1년을 일하면 10년

을 일하는 같은 임금을 받는 현재 임금제

계로는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임금차

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

부는 최소 3만 원 수준의 호봉제를 요구

하는 노동자들에게 고작 장기근속가산금

1만 원을 인상하겠다는 안을 내냈다. 정

부안으로는 10년 차 노동자들의 임금 인

상액이 고작 4만 원밖에 안 된다.

게다가 장기근속가산금은 3년 미만의

노동자들은 받을 수 없고, 상한제도 있어

오래 일한 노동자들은 더는 임금이 올라가

지도 않는다. 또한 장기근속가산금은 통상

임금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해석 때문

에 각종 수당을 책정할 때도 손해를 본다.

따라서 폐지화된 장기근속가산금이 아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를 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가?

» 1면에서 이어짐

투잡

박근혜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를 거침찬 수준의 열악한 일자리라는 것을 의식한 표현이다.

현재 노동자 10명 중 1명이 시간제로 일하는데, 현대경제연구원의 추계를 보면 이 중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3.3퍼센트에 불과하다.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들은 대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은 무려 56퍼센트로, OECD 평균 13.1퍼센트를 크게 웃돈다. 지난 3년간 노동부가 지원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도 질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규경감사에서 폭로된 것을 보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6840.6원에 불과했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 평균 시급의 44.7퍼센트, 비정규직 평균 시급의 73퍼센트 수준이다.

공공부문 내 시간제 일자리의 조건도 형편없다. 돌봄장사의 경우 26.3퍼센트가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계약자인데, 이들은 실제 노동시간보다 축소된 근로계약을 강요당해 왔다. 주 15시간 이하의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만들어질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이라며 선을 긋지만, “양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간제 공무원 제도를 보면, 공무원 연금도 받지 못하는 데다 무엇보다 전일제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박근혜는 “시간제”가 어감이 안 좋다며 “시간선택제”로 바꿨지만,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선택권(전일제 전환)은 주지 않는 것이다.

근무시간에 비해해 임금을 지급하고, 승진 연수도 근무시간에 비해해 인정하겠다는 것은 일명 관습은 조건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승진은 전일제보다 곱절 가량 뒤처질 수 있고, 적은 노동시간만큼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시간제 공무원에 “투잡” 갖는 것을 허용한 것은 이런 현실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네덜란드나 독일 등 유럽의 시간제 일자리 경험을 보면, 아무리 정규직 또는 상용형 시간제라 하더라도 저임금과 경력전망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없었다.

이중의 굴레

박근혜는 마치 시간제 일자리가 여성에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박근혜 식 “일과 가정의 양립”은 이중의 굴레일 뿐이다. 여전히 여성은 가정에서 육아와 주된 책임을 져야 하고, 가정 밖에서는 부차적인 노동력 취급을 당한다.

지금도 우리 나라 남녀 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가 확대되면 여성 빈곤이 증대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더욱 낮아질 것이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가 많은 네덜란드에서 여성들이 고위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려 한다. 그러나 이는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해 무상 보육을 제공하지 않고 개별 가정의 여성들에게 육아를 떠넘기겠다는 얘기다. 최근 한 국을 방문했던 카탈레네 파슈어 네덜란드 노동시장으로 끌어내려 한다. 그러나 이는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해 무상 보육을 제공하지 않고 개별 가정의 여성들에게 육아를 떠넘기겠다는 얘기다. 최근 한 국을 방문했던 카탈레네 파슈어 네덜란드 노동시장으로 끌어내려 한다.

“스웨덴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다른 선택을 했다. 스웨덴은 출산율도 높고 정규직도 많다. 네덜란드는 사실이 부족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동시간 유연화를 택했다.”

유연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에 진보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공

감한다. 그러나 대응 방안을 둘러싸고는 입장 차이가 있다.

일자리에서는 시간제 일자리 자체에 반대하기보다,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시간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간제 노동에 대한 차별 금지라든지, 전일제로의 전환 같은 방안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경험을 보면, 아무리 시간제 일자리 보호 규정이 있어도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층의 대규모 양산을 막을 수는 없었다. 독일은 물론 네덜란드에서도 빈곤 노동자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시간제 노동에 종사하는 단독가구주는 더 혼하게 빈곤에 빠졌다.

독일과 네덜란드에는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기업주가 “일감이 없다”고 하면 그만이다. 파슈어 네덜란드 노동자들은 육아나 가족 돌봄 또는 여가를 위해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바꾸거나 풀타임에서 파트타임 전환이 더 쉽고 그 반대는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시간제 일자리 보완원이라고 할 만한, 앞서 언급한 입장의 필바탕에는 유연노동이 기업주뿐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듯하다. 시간제 일자리를 증대는 저임금 노동자를 대거 양산할 뿐 아니라, 전일제를 강요하며 공공부문을 공격하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도 동반 하락시킬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가들은 박근혜의 시간제 일자리 도입에 문을 열어주지 말고 유보 없이 반대해야 한다.



박근혜의 계획은 대많은 여성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내몰 것이다.

실노동시간 단축은 미루면서 노동시간과 임금의 유연화(근속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 해체 등)를 추진해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이 치르게 하려 한다. 박근혜의 시간제 일자리는 노동비용을 절감하고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시간제 일자리 증대는 저임금 노동자를 대거 양산할 뿐 아니라, 전일제를 강요하며 공공부문을 공격하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도 동반 하락시킬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가들은 박근혜의 시간제 일자리 도입에 문을 열어주지 말고 유보 없이 반대해야 한다.

저항

인타깝게도 일각에서는,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공공부문이 시간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안중에 없고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배치한다. 사용자들에게 유연성이란 초과수당 없이 노동시간 연장하기, 몰랑 없을 때 노동시간 단축하고 임금도 삭감하기, 유급휴일 축소하기, 노동자 자르기 등을 아울러 에두르는 코드명 같은 것이다.

노동자들이 정밀 일과 가정, 일과 삶을 병행하기를 바란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임금과 노동조건 완화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김하영

독일 노동운동가가 말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 “정규직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로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가 총 고용을 늘렸다고 주장한다. 독일 좌파 정당 ‘디링케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정간을 인 마르크스21에서 활동하는 다비트 마이엔라이스가 독일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을 전해 왔다. 다비트 마이엔라이스는 디링케의 해선주 의회 경제 고문이다.

2002년부터 독일의 사민당 · 녹색당 연립정부는 노동과 조세 관련 법규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기 시작했다. 그 전 몇 년 동안 독일 기업주들이 ‘개혁이 지체’된다며 불평을 토로하던 상황이었다. 독일 기업주들은 이 ‘개혁 지체’ 탓에 독일 경제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그중에서도 미국(클린턴 집권기에 미국의 GDP 성장률은 독일의 거의 곱절이었다)보다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불평했다.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에는 ‘노동시장 선진화 법’이라고 불린 여러 법안들이 있다. 이 법은 당시 총리 슈뢰더가 설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했는데, 폭스바겐의 인사부장을 지낸 하르츠가 그 위원회의 의장이었다. 그래서 이 개혁안은 보통 ‘하르츠 법(I ~ IV)’이라고 불리게 됐다.

이 개혁안의 목표는 이른바 “경직된 구조”인 독일 노동시장을 대폭 “유연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독일 노동시장의 상당 부분에 규제가 심하고, 이른바 정규직(흔히 종신 고용이 보장되고 사회안전망이 제공되는 일자리)에 유리하다는 이유였다.

정부는 이 개혁안이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러 목표의 하나로 독일 노동시장에 저임금 부문을 창출하겠다는 점은 밝혔다. 그러면 특별한 기술이 없거나 오랫동안 실업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인기가 없었던 것은 하르츠 IV법이었다. 하르츠 IV법은 기존의 실업급여 체계를 폐지하도록 규정했다. 하르츠 IV법 시행 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이제 직장에 다닐 때 벌던 순소득의 64퍼센트만을 최대 1년간 실업급여로 받게 됐다. 1년 뒤부터는 급여액이 형편없어져서, 법정 빈곤선 이하로 떨어진다.

여러 자선단체와 종교단체는 하르츠 IV법이 규정한 급여를 최소 25퍼센트는 올려야 한다고 계산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이 식비 등 필수적 지출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르츠 IV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박해받고 있고, 계속해서 “사례관리자”(급여 대상자에 대해 수급 자격 등을 심사 ·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감시당한다. 실업자들은 소개 받은 일자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자격 조건이 어떻든, 이전 직업이 무엇이든, 전에는 임금을 얼마를 받았든 상관없이 그래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

이런 상황은 전반적인 임금 수준에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했다. 실업자들은 하르츠 IV법에서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낮은 임금이라도 감수할 태세가 됐고,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직장을 잃으면 하르츠 IV법의 제물이 될까 봐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이다.

이전의 국경 고용보호와 달리 하르츠 IV법에 따른 급여는 더는 사람들이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안 됐고, 고용 보호와 임금을 대체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국가의 ‘도움’을 받기 전에 개인적으로 저축해 놓은 돈을 몽땅 써서라도 민간 노령연금 같은 것에 가입해야 할



판이다. 즉, 일자리를 잃고 1년 안에 취직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은 완전히 빈곤해져서 저축한 돈을 죄다 써야 하고, 부동산 · 자동차 · 보험금 등 돈 될 만한 것은 뭉툼 없애야 팔아치워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실시한 한 연구의 결과가 보여 주듯, 하르츠 IV법의 가혹한 정책은 장기 실업을 낮추지 못했다.

그보다는 덜 알려져 있지만 하르츠 I ~ III법도 전체적인 임금 수준과 노동조건에 결코 덜 해로운 것이 아니었다. 하르츠 I ~ III법은 합법적 고용의 기준을 엄격하게 완화시켰다.

1990년대에 처음 도입된 시간제 고용 형태인 ‘미니잡(Mini Job)’에 대한 제약을 대폭 풀었는데, 특히 주당 노동시간 제한 완화가 중요했다. 원래 미니잡은 일주일에 15시간 이하, 월급은 4백 유로(57만 원) 이하로 제한됐다.[그 이상 일하면 미니잡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원래 미니잡은 성수기 등 짧은 기간에 추가 노동이 필요한 기업들과 부업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주부 · 학생 · 연금 생활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겠다는 미명 아래 도입됐다.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하르츠 개혁을 비판했던 사람들의 경고(심지어 하르츠 개혁이 시행되기도 전에 한 경고)가 옳았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독일 일자리의 거의 4분의 1이 미니잡이다. 미니잡 노동자들의 약 3분의 1(31퍼센트)은 일주일에 19시간 이상 일하고 월급으로 4백 유로를 받는다. 미니잡 노동자의 겨우 32퍼센트만이 시간당 8.5유로를 받고, 50퍼센트는 시간당 7유로도 못 받다.(시급 8.5유로는 독일 노동조합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그걸 받고 주당 40시간을 일해 봐야 빈곤선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하르츠 개혁 이후 저임금 노동자(임금 중간값의 60퍼센트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이 전체 노동자의 22퍼센트(0)로 급격히 늘었다.

미니잡 노동자들의 3분의 1은 임금 수준이 너무 낮은 나머지 직접 하나만으로는 공과금도 못 내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미니잡 노동자 중 4분의 1만이 비숙련 노동자이고, 나머지 4분의 3은 숙련 노동자거나 학사 학위가 있는 사람



독일 ‘하르츠 개혁’은 시간제 일자리가 낳을 재앙을 보여준다 — ‘하르츠 개혁’에 반대한 독일 노동자들

들이다.

또한, 미니잡 노동자의 약 3분의 2는 여성이다. 이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대가로 극도로 낮은 임금을 받고, 흔히 불편한 시간에 일하고(특히 서브시스템과 소매업에서), 대개는 자기 ‘스펙’에 못 미치는 일을 한다.

임금 뚝은 줄고 자본 뚝은 늘고

10년 전 하르츠 개혁이 도입될 때 정부가 떠들던 주장과는 상반되게, 고용 보장 제도를 파괴했지만 독일 노동자의 총노동 시간이 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서, 하르츠 개혁은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은 촉진

했지만 전체 일의 양을 늘리지는 않았다.

독일 노동자들이 일한 노동시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체해 왔다.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가 기존의 정규직을 대체했을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개혁은 독일 경제의 동력을 그다지 강화하지 못했다. 독일의 경기 순환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세계경제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노동시장 개혁은 임금 수준을 떨어뜨렸고,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압박했다. 왜냐하면 미니잡 노동자 등 규제 완화로 생겨난 일자리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자기가 일하는 기업과 그 기업에서 일하는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계가 느

슨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국민소득의 분배를 끊임 없이, 그리고 급격하게 바꾸었다. 즉, 하위 80퍼센트의 몫이 상위 5퍼센트의 몫으로 갔고, 임금 몫이 자본 몫으로 갔다. 미니잡에 대한 규제 완화뿐 아니라, 하르츠 개혁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하청 노동의 자유화였다. 아직은 하도급이 전체 일자리의 2.5퍼센트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청년들의 생애 첫 일자리가 하청업체 일자리인 경우가 흔하다.

하청 노동은 보통 자동차 생산이나 화학산업처럼 수익성이 가장 높고 가장 수출지향적인 산업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용된다. 하청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은 그들이 고용된 산업 부문 표준 임금보다 약 40퍼센트 정도 낮다.

미니잡, 미니잡(Midi Job, 월급이 최대 8백 유로인 일자리), 파트타임, 시간제 하청을 비롯한 각종 비정규 일자리는 현재 독일 전체 일자리의 38퍼센트를 차지한다. 경제 위기의 즉각적 타격에서 회복한 이후 독일에서 새로 생겨난 일자리 중 겨우 15퍼센트만이 정규직이었고, 42퍼센트는 기간제였고, 43퍼센트는 하청 계약직이었다.

한때는 정규직 일자리로 여겨지던 직업들이 점점 더 비정규직으로 바뀌고 있고, 사람들이 임금을 가지고 쾌활한 삶을 살아가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은 지난 몇 년 동안 노동시장 개혁의 악영향과 파도함을 비판했다. 2000년대 초 국회에서 이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을 때 DGB는 노동시장 개혁이 낳을 예측 가능한 악영향에 대해서 경고했다.

독일노동 지도부의 잘못된 대응

그러나 DGB 지도부는 개혁한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삼갔다. 왜냐하면 DGB 지도부는 개혁안을 발한 사회민주당과 밀접한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들은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를 거의 조직하지 않았고, 시위를 할 때도 개혁의 과도함만 비판했지 개혁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았다.

노동시장 개혁과 그로 인한 고용 구조의 변화 때문에 노동조합에 속한 노동자들이 40퍼센트가량 줄었는데도 그랬다. 여전히 노동 지도부는 자본가나 정부 같은 권력자들과의 협력에 희망을 걸고 있다. 그들은 이를 통해서 가장 잘 조직되고 수익이 높은 산업의 노동자들만큼은 고통스런 긴축에서 지켜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이 노사정 위원회는 없지만 노사정이 협력해 온 전통은 있다. 그러나 오래 전에 자본은 이를 무력화했는데 노조 지도부와 사회민주당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노사 간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던, 이윤율이 높고 꾸준한 성장하던 호시절이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날 자본가들은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만, 즉 정부의 지원과 개입이 아쉽고, 노동자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도록 해야 할 때만 협상을 하고자 한다.

경제 위기가 가장 심각할 때 이 전략은 어느 정도 먹히는 듯했다.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줄어드는 임금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조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일단 급에 한 위기를 넘기자 기업주들은 결코 유예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인 고용으로 대체했다.

번역 이진화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의 대일본 전략

이현주

1945년 이래 미국은 일본을 자신의 동맹으로 붙잡아 두는 게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다. 만약 일본이 미국의 잠재적 라이벌과 손잡는다면, 미국의 헤게모니에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런데 냉전 해체 무렵 미국은 일본을의 심수렵게 바라봐야 했다. 요즘 미국 지배자들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듯이,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는 일본이 그럴 수 있을지가 걱정거리였다. 냉전 시대 동안 미국 날개 아래 있으면서 훌쩍 커버린 한 주요 동맹국이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져도 미국을 등지 지 않을지 확실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때 미일동맹은 결보기와 달리 무역, 대외정책, 미군기지 등의 문제들을 둘러싸고 빼각거렸다. 게다가 1993년 일본 자민당의 장기 집권 체제가 붕괴하는 듯하고 비자유당 연립정권이 들어선 점도 미국한테 불안감을 안겨 했다.

미국의 '나이 구상(Nye Initiative)'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 '나이 구상'은 1994년에 클린턴 행정부 국방차관보로 임명된 조지프 나이가 행한 '미일 안보 재검의'에 근거한 냉전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방안이다. '나이 구상'은 1995년 미국 국방부가 제출한 '동아시아 전략 보고서'(일명'나이 리포트')에 잘 반영돼 있다.

이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한반도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10만 병력을 유지함으로 써 "세계적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패권 국가의 출현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미일 양국은 동맹을 강화하고, 그 안에서 일본의 구실을 확대하며, 이것을 "지역 및 국제적인 안전보장 축진의 기본 메커니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이런 구상은 한편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구상은 '일본이 미국에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나이는 "일본이 성장하면서 [미국에] 의존적인 관계에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상호 의존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득책"좋은 책략"이라고 지적했다.

즉, 미일동맹 속에서 일본의 적극적 구실을 장려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일본을 단속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미일 안보 재정의'는 "냉전 후에도 일본이 미국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말레이시아 전 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 노르딘 소피)

이 무렵 미국은 일본을 MD(미사일방어) 체제로도 끌어들였다. 1998년 북한 핵실험문제연구소 소장 노르딘 소피)

1994년 한반도 위기와 1996년 대만 해협 위기*는 이 방향에 힘을 실어 주는 환경을 조성했다.

당시에 일본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대조적으로 미국 경제는 주목할 만하게 회복되면서 '일본의 위협'에 대한 미국 내의 우려도 누그러졌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일본과의 '동맹 강화'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고, 일본 내에서도 미국 일본도의 대외정책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이 후퇴했다. 그리고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 두 나라가 공동의 인식을 하게 된다.

1996년 '21세기 미일공동안보선언'과 1997년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신가이드라인)*'은 이런 인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미일동맹의 분명한 전환점이었다.

신가이드라인

신가이드라인이 특히 '주변사태'에 중점을 둔 것은 전과 두드러지게 다른 핵심 특징이었다. 구가이드라인이 소련으로 부터의 '일본 방위'가 중심이었다면, 신가이드라인은 '주변사태'시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주변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이 미군을 '후방지역'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냉전기에 일본은 미국에 기지를 제공하고 비용을 대는 일에 국한된 '수동적' 구실에 머물렀다면, 이제 더 나아가 자위대가 일본 바깥에서 미군을 도와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사코 이것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제도화한 것이었고, 그동안 일본이 유지해 온 전수방위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었다. 게다가 신가이드라인은 '주변사태'를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로,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태의 성질에 착안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미일 군대가 국동을 넘어 그 밖의 지역에서도 협력할 수 있도록 열어 둔 것이다.

물론 당시 미국과 일본이 가장 염두에 둔 것은 한반도와 대만에서 벌어질 '유사사태'였다. 당시 한 방위청 간부는 "일본 주변의 위기에 일본은 구실이 가장 크다고 강조하는 것은 한반도 위기"라고 말했다. **이미 이때부터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자신의 군사 개입을 지원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 무렵 미국은 일본을 MD(미사일방어) 체제로도 끌어들였다. 1998년 북한 핵실험문제연구소 소장 노르딘 소피)



두 제국주의 국가들의 위험한 악수 올해 2월 미일정상회담에서 만난 오바마와 아베.

공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 미사일을 핑계했지만, MD는 명백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양국은 처음엔 공동 연구로 시작했지만, 곧 공동 개발로 나아가고, 2000년대 들어서는 실전 배치도 시작했다.

'테러와의 전쟁'

부시 정부하에서 미일동맹은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했다. 2000년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는 "1997년의 신가이드

라인은 상한선(ceiling)이 아니라 하한선(floor)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이드라인에 담긴 내용은 최소 수준이라는 것이다. 아미티지는 부시 정부에서 국무부 장관을 지냈다. 1997년 신가이드라인은 분명 파격적이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여전히 자위대는 전투나 전투지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 아래서만 작전에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다음 목표는 이런 제한을 없애는 것이었다.

"미일동맹을 미영동맹의 수준으로 격상시켜 일본을 '아시아의 영국'으로" 만드는 것이 미국의 목표였다. 이것은 일본의 함으로써 "미일 동맹 간의 '역할 나누기'와 '통합'을 의미했다(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부시 정부하에서 이 계획은 놀랍도록 많이 진전됐다. 9·11 테러는 이 추세를 가속시키는 중요한 계기였다. 부시 정부는 미일동맹이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같은 '전지구적 도전'에 맞선 '전지구적 동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헌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던 일본 총리 고이즈미는 부시의 '러브콜'에 적극 응답했다.

2001년 일본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도우려고 인도양에 이지스함을

파견했다. 뒤이어 2004년에는 드디어 육해공을 망라한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군대가 전쟁에 참여한 것이었다.

2005년 일본은 주일미군 재배치를 위한 비용을 상당 부분(총 3조 엔) 부담하기로 했다. 주일미군 재배치는 9·11 이후 미국이 '다양한 형태의 불특정 안보 위협'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입하기 위해 추진한 '해의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에 따른 것이다.

주일미군 재배치 계획은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일체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 '시설과 서비스 상호 이용'과 '합동작전체계'가 핵심 키워드였다. 예컨대, 미 제5공군 사령부와 일본 항공자위대 사령부를 병합하고,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와 일본 육상자위대가 시설을 공유하기로 했다.

일본은 2004년부터 PAC-3(패트리어트 미사일)와 SM-3(스탠다드 미사일)등의 MD체제를 실전 배치했다. 또, 미국과의 MD 협력을 원활하게 하려고(일본 내에서 생산한 MD 관련 부품들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완화했다.

미국은 이와 같은 계획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일본에 평화헌법 개정도

파견했다. 뒤이어 2004년에는 드디어 육해공을 망라한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군대가 전쟁에 참여한 것이었다.

2005년 일본은 주일미군 재배치를 위한 비용을 상당 부분(총 3조 엔) 부담하기로 했다. 주일미군 재배치는 9·11 이후 미국이 '다양한 형태의 불특정 안보 위협'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입하기 위해 추진한 '해의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에 따른 것이다.

주일미군 재배치 계획은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일체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 '시설과 서비스 상호 이용'과 '합동작전체계'가 핵심 키워드였다. 예컨대, 미 제5공군 사령부와 일본 항공자위대 사령부를 병합하고,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와 일본 육상자위대가 시설을 공유하기로 했다.

일본은 2004년부터 PAC-3(패트리어트 미사일)와 SM-3(스탠다드 미사일)등의 MD체제를 실전 배치했다. 또, 미국과의 MD 협력을 원활하게 하려고(일본 내에서 생산한 MD 관련 부품들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완화했다.

미국은 이와 같은 계획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일본에 평화헌법 개정도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요구했다.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일본을 '아시아의 영국'으로 만들려는 계획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이라크에서조차 자위대는 여전히 군사작전을 펼칠 수 없었으며, 의료 등 '인도주의적' 역할을 수행할 때도 영국과 호주 군대의 보호를 받아야 했다.

아미티지는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는 수고를 하는 것보다는 헌법에 대한 공식 해석을 바꾸는 쪽이 더 간단하다"는 조언도 아까지 않았다.

이런 추세는 오바마 정부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2009년에 일본에서 '탈미일 아(脫米人亞)를 내세운 민주당 하토야마 내각이 출범하면서 미일동맹은 잠시 내각이 흔들렸다. 중국이 2008년을 기점으로 일본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되자 동맹국인 미국의 존에서 벗어나 중국을 중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2010년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동맹을 다시금 다졌었다. 무엇보다 이때 후텐마 미군기지를 오키나와현 '내'로 이전하기로 한 합의가 매우 중요한 성과다.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레프트21 | 제115호

대국의 자리에 올랐고, 이것은 일본 지배자들에게 엄청난 굴욕과 충격을 안겨줬다. 최근 몇년간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등을 둘러싸고 중일 간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배경의 일부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매우 빠른 속도로 군사력을 현대화하는 중국에 홀로 맞서기엔 부족함을 느낀다. 주로 전쟁 범죄라는 '유산' 때문이다.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상징되는 전쟁 범죄의 명에서 벗어나는 데 미국의 요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때 미국은 이 지역의 미군의 존재가 일본 군국주의가 뛰쳐나오지 않도록 하는 "병마개" 구실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미국은 병을 평화 상대로 만드는 데 핵심적 구실을 한다.

바로 이 때문에 미일 관계는 모순돼 있다. 즉,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는 동시에, 일본이 미국의 날개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위 파트너 지위에 만족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어쩌면 일본 우익은 미래에도 미국의 날개 아래 머무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일본의 핵무장 시나리오는 미국에겐 국론을 분열시킬 우려 사항이다. 그러나 최근 매사추세츠공대(MIT) 국제연구센터 소장 리처드 새뮤얼스는 한 보고서에서 일본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벌미로 핵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물론 일본의 다수 민중은 일본이 또 다시 전쟁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환영할 리가 없겠지만 말이다. 우리는 일본에서 일본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진정한 좌파가 탄생하기를 바라야 한다.

이후 지금까지의 명백한 추세는 미일 동맹 강화였다. 미국은 일본의 함을 키워서 이 지역의 안보 부담을 나눠 맡고, 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물론 목적은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것이다.

일본이 여기에 응하는 것은 일본이 미국의 '종속국가'여서가 아니다. 일본은 중국과 경제적 교류를 증대시키면서도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부상을 누구보다 걱정한다. 중국의 부상이 경제 대국으로서 일본이 지난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누려온 위상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8년 이후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2010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

넌안면 광장 차량 폭발 사건

진정한 원인은 중국 제국주의의 억압이다

강영익

10월 28일 중국 베이징의 뎬안면(천안문) 광장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출신의 위구르 명 센카쿠) 등을 둘러싸고 중일 간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배경의 일부인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을 이슬람주의 테러 조직의 소행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중앙정보위원회 서기 명칭주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다수 포함된 상하이 협력기구(이하 SCO) 회의에서 "이번 테러 사건의 배후는 동투르키스탄이슬람 운동(이하 ETIM)"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들은 알카에다와 연결된 테러 조직이며, "테러리즘은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적"이고, "테러라 활동을 위해 (SCO 소속 국가 간) 압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이슬람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뒤섞는 것이다. 이 사건의 진정한 원인은 중국의 제국주의적 신장 지배가 낳은 억압과 빈곤에서 찾아야 한다. 중국 지배자들의 제국주의적 억압과 식민화 정책으로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인을 포함한 소수민족들은 그동안 끔찍한 고통을 당했다. 1949년 중국 공산당 정부는 중국 서북쪽에 위치한 신장 지역을 현지 소수민족들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로 점령했다. 이 지역을 주변국에 대한 완충 지대로 삼기 위해서였다.

중국 정부는 민족자결을 요구하는 위구르인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했다. 그리고 한족을 이주시켜 소수민족의 저항을 억누르려 했다. 1949년 신장 지역 인구에서 한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6퍼센트에 불과했는데, 점령 이후 중국 정부의 대규모 이주 정책으로 이례는 40퍼센트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중국 지배자들은 위구르인의 종교인 이슬람도 탄압했다. 1960년대 문화혁명은 이슬람 상징물과 모스크가 '봉건 악습'으로 여겨져 파괴되기도 했다. 지금도 쿠란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이슬람 성직자들을 구금하거나, 학교·병원·광산 등지에서 라마단 금식을 금지하는 등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신장 지역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이 등장한 건 바로 이러한 중국의 민족 억

압 때문인 것이다. 개혁·개방이 시작되며 잠시 완화되는 듯하던 중국 정부의 억압은 1980년대 말부터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1989년 뎬안면 항쟁의 영향이 소수민족에 미치는 것을 막아 구로 돌린했다. 그 직후 지프차기 폭발했고, 이 폭발로 안타깝게도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을 이슬람주의 테러 조직의 소행이라고 비난하고 있

다. 중앙정보위원회 서기 명칭주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다수 포함된 상하이 협력기구(이하 SCO) 회의에서 "이번 테러 사건의 배후는 동투르키스탄이슬람 운동(이하 ETIM)"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들은 알카에다와 연결된 테러 조직이며, "테러리즘은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적"이고, "테러 활동을 위해 (SCO 소속 국가 간) 압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이슬람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뒤섞는 것이다. 이 사건의 진정한 원인은 중국의 제국주의적 신장 지배가 낳은 억압과 빈곤에서 찾아야 한다. 중국 지배자들의 제국주의적 억압과 식민화 정책으로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인을 포함한 소수민족들은 그동안 끔찍한 고통을 당했다. 1949년 중국 공산당 정부는 중국 서북쪽에 위치한 신장 지역을 현지 소수민족들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로 점령했다. 이 지역을 주변국에 대한 완충 지대로 삼기 위해서였다.

중국 정부는 민족자결을 요구하는 위구르인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했다. 그리고 한족을 이주시켜 소수민족의 저항을 억누르려 했다. 1949년 신장 지역 인구에서 한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6퍼센트에 불과했는데, 점령 이후 중국 정부의 대규모 이주 정책으로 이례는 40퍼센트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중국 지배자들은 위구르인의 종교인 이슬람도 탄압했다. 1960년대 문화혁명은 이슬람 상징물과 모스크가 '봉건 악습'으로 여겨져 파괴되기도 했다. 지금도 쿠란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이슬람 성직자들을 구금하거나, 학교·병원·광산 등지에서 라마단 금식을 금지하는 등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신장 지역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이 등장한 건 바로 이러한 중국의 민족 억

압 때문인 것이다. 개혁·개방이 시작되며 잠시 완화되는 듯하던 중국 정부의 억압은 1980년대 말부터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1989년 뎬안면 항쟁의 영향이 소수민족에 미치는 것을 막아 구로 돌린했다. 그 직후 지프차기 폭발했고, 이 폭발로 안타깝게도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을 이슬람주의 테러 조직의 소행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중앙정보위원회 서기 명칭주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다수 포함된 상하이 협력기구(이하 SCO) 회의에서 "이번 테러 사건의 배후는 동투르키스탄이슬람 운동(이하 ETIM)"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들은 알카에다와 연결된 테러 조직이며, "테러리즘은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적"이고, "테러 활동을 위해 (SCO 소속 국가 간) 압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이슬람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뒤섞는 것이다. 이 사건의 진정한 원인은 중국의 제국주의적 신장 지배가 낳은 억압과 빈곤에서 찾아야 한다. 중국 지배자들의 제국주의적 억압과 식민화 정책으로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인을 포함한 소수민족들은 그동안 끔찍한 고통을 당했다. 1949년 중국 공산당 정부는 중국 서북쪽에 위치한 신장 지역을 현지 소수민족들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로 점령했다. 이 지역을 주변국에 대한 완충 지대로 삼기 위해서였다.

중국 정부는 민족자결을 요구하는 위구르인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했다. 그리고 한족을 이주시켜 소수민족의 저항을 억누르려 했다. 1949년 신장 지역 인구에서 한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6퍼센트에 불과했는데, 점령 이후 중국 정부의 대규모 이주 정책으로 이례는 40퍼센트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중국 지배자들은 위구르인의 종교인 이슬람도 탄압했다. 1960년대 문화혁명은 이슬람 상징물과 모스크가 '봉건 악습'으로 여겨져 파괴되기도 했다. 지금도 쿠란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이슬람 성직자들을 구금하거나, 학교·병원·광산 등지에서 라마단 금식을 금지하는 등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신장 지역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이 등장한 건 바로 이러한 중국의 민족 억

압 때문인 것이다. 개혁·개방이 시작되며 잠시 완화되는 듯하던 중국 정부의 억압은 1980년대 말부터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1989년 뎬안면 항쟁의 영향이 소수민족에 미치는 것을 막아 구로 돌린했다. 그 직후 지프차기 폭발했고, 이 폭발로 안타깝게도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을 이슬람주의 테러 조직의 소행이라고 비난하고 있

다. 중앙정보위원회 서기 명칭주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다수 포함된 상하이 협력기구(이하 SCO) 회의에서 "이번 테러 사건의 배후는 동투르키스탄이슬람 운동(이하 ETIM)"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들은 알카에다와 연결된 테러 조직이며, "테러리즘은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적"이고, "테러 활동을 위해 (SCO 소속 국가 간) 압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이슬람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뒤섞는 것이다. 이 사건의 진정한 원인은 중국의 제국주의적 신장 지배가 낳은 억압과 빈곤에서 찾아야 한다. 중국 지배자들의 제국주의적 억압과 식민화 정책으로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인을 포함한 소수민족들은 그동안 끔찍한 고통을 당했다. 1949년 중국 공산당 정부는 중국 서북쪽에 위치한 신장 지역을 현지 소수민족들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로 점령했다. 이 지역을 주변국에 대한 완충 지대로 삼기 위해서였다.

중국 정부는 민족자결을 요구하는 위구르인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했다. 그리고 한족을 이주시켜 소수민족의 저항을 억누르려 했다. 1949년 신장 지역 인구에서 한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6퍼센트에 불과했는데, 점령 이후 중국 정부의 대규모 이주 정책으로 이례는 40퍼센트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중국 지배자들은 위구르인의 종교인 이슬람도 탄압했다. 1960년대 문화혁명은 이슬람 상징물과 모스크가 '봉건 악습'으로 여겨져 파괴되기도 했다. 지금도 쿠란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이슬람 성직자들을 구금하거나, 학교·병원·광산 등지에서 라마단 금식을 금지하는 등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신장 지역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이 등장한 건 바로 이러한 중국의 민족 억

엔제나 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학살해 왔다.

그때 들어 티베트·NEY명구 자치구 등에서 소수민족들의 저항이 다시 크게 일어나는 조짐이 있다. 신장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6월 투루판에서 무려 35명이 일어난 35명이 사망한 테이, 신장 남부 지역에서 현지 공안과 주민 간 유혈 충돌로 1백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뎬안면 차량 폭발 사건은 최근에 일어난 저항과 학살의 연장선 상에서 봐야 한다.

중국 지배자들은 이참에 신장 지역에 주한 신장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했다.

이번 차량 폭발 사고로 이미 신장 위구르 자치구 현지에서는 탄압이 강화되고 있다. 위구르인 53명이 종교 간행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중국 경찰에 체포됐다. 중국 당국은 신장 지역에서 베이징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자동 감청하고, 위구르인 호객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군이 신장 지역에서 대대적인 반테러 작전을 벌이며 준비한다는 얘기도 있다.

저항

중국 지배자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이번 사건을 이용할 것이다. SCO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국제 공조를 강조한 것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더 깊게 하고 그 쪽으로의 진출을 강화하고자 이번 사건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신장의 소수민족들을 완전히 굴복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 때마다 60년 전에 이 저항은 끝났을 것이다. 오히려 위구르인을 포함한 소수민족들은 더 깊은 원한을 세기며 더 큰 반발과 저항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를 해결할 최충적 대안은, 무엇보다 중국 노동계급이 중국의 체제를 전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런 혁명이 일어나면, 티베트와 신장 등에 있는 중국 내 소수민족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자결권을 획득하는 데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강화의 걸림돌을 지워 준 것이기도 하다.

정부의 이런 행보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집단적 자위권을 옹고 군사대국으로 등장할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커다란 긴장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조차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면 "중·일 간의 패권 다툼과 군비 경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거대한 한랭 전선을 드러낼 것"이라고 염려했 정도다.

물론 한국 지배자들은 이런 사태 전개가 지정학적 동맹은 미국과 맺은 반면에 경제는 중국 시장에 의존해 온 자신들을

더 곤혹스럽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한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앞세워 중국 견제에 나선 이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동의하는 건 불가피하다는 일종의 현실론을 따르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취임 초부터 강경한 대북 정책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춰 온 박근혜가 자초한 결과기도 하다. 박근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선다며 대북 경제 공작 계획(맞춤형 억제 전략) 등을 구세웠었고, 미국한테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를 요청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적절히 이용했다.

대북 '위협'에 대처하려면 한·미·일 삼각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앞세웠던 것이다. 여기에 MD(미사일방어체계)의 구축이 주요한 명분으로 활용됐다. 결국 한국 지배자들이 한미동맹 강화에 나선 게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도와준 꼴이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이 한반도에 군사 개입을 하려던 한국 정부의 동의를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한국 지배자들의 바람을 들어줄지는 의문

통합진보당 위원장당 해산심판 청구

낡은 사회질서 유지가 목적이다

김문성

집권 반 년 만에 각종 복지공약 파기와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으로 강성우파의 반동들을 드러낸 박근혜가 또 하나의 반민주 도발을 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이다.

진보당은 대표적 진보정당으로서 지난해 총선 정당비례에서 2백19만여 명의 지지를 받았다. 국회의원도 6명이나 된다. 총선 뒤 우여곡절 끝에 분당한 것을 감안해도 적어도 1백만 명 남짓에게서 지지받는 정당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당을 대통령과 장관들 열몇 명과 헌법재판관 6명이면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급가옥조처럼 여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게 얼마나 기만적이고, 평균적인 자유민주주의조차 못 되는 반민주적 특권 질서인지 알 만하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까지 허용해야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은 경제 위기를 앞두고 좌파 단속을 위한 선제 조치이며, 반민주 폭거다. 새누리당이 연이어 '국민주권'들을에 반하는 강령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들을 해산시키는 법을 내놓겠다고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박근혜는 이런 아만적 탄압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대선 개입 의혹에서 떠 때려 물리고, 우파 결집과 정국 주도권 회복을 노린다.

또한 해산심판 청구는 이석기 의원 등 'RO' 사건 재판부에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거꾸로 'RO' 사건 재판부의 유죄 판결은 진보당 위원 판결을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M16

경기 화성갑 보결선거에서 진보당이 8백센트로 적지 않게 득표한 것도 한 요인일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내법 정책을 대한 불만이 원인으로 수렴되는 것을 미리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선거 전략 측면에서 보면, 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했던 민주당을 압박하는 전술이기도 하다.

한편, 현 정치 상황을 '유신 회귀' 또는 '공안정국'이라 보기는 힘들다. 좌파 일부가 법적 배제와 협박을 받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매우 대규모 서울 도심 촛불집회와 여러 활동이 큰 제약 없이 벌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은 박근혜의 유신 스타일 통치가 유신 체제를 골장 만들어낼 수 없다는 분석의 올바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

예를 들어, 김기춘이 검찰총장으로서 주도한 1989년 공안정국 때는 경찰에게 제하하던 발표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M16 소총이 지급됐다. 한동안 신문 1면은 연일 민주화운동의 지도적 인사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 소식이 실렸다. 현대중공업 파업 등에 내전을 발발케하는 폭력 탄압이 벌어졌다. 1천5백여 명이 해직된 전교조 탄압도 바로 이 때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고 상당한 조직력이 있는 진보당 해산을 헌법재판소가 선불리 결정할 순 없을 것이다. 지금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정치·사회적 세력관계의 추이를 살피며 판결을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정부와 집권당은 헌법재판소 법 제57조 가처분 조항을 이용해 진보당 활동 일시 정치 가처분이라도 하라고 압박하려 할 것이다.

지금 노동운동은 이런 공안정국의 위협성을 경계하면서도, 박근혜의 의도와 모순을 직시하면서 위축되지 말고, 좌파 단속 시도 일체에 항의·규탄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계급적 요구를 가지고 진정한 대중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는 비민주적인가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이 '법모두 체계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첫째, 진보당과 그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활동 대부분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근거를 들이댄다. 일심회, 왕재산, RO 등이 모두 북한 지령의 전달 통로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심회와 왕재산은 범일조차 그 조직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또한 본 재판이 시작도 안한 RO의 기소 혐의를 근거로 진보당을 위원정당으로 하는 것은 근대 사법의 제일 원리인 판결 확정 전 무죄 추정 원칙도 내뽐개친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이 북한의 주장과 비순하다 해서 종북으로 모는 것도 억지다. 우익들은 수 틀리면 '김일성처럼 눈코입이 다 있는 걸 보니 종북'이라고 할 자들



‘미스터 국가보안법’ 황교안

이다. 이런 요구들은 북한과 아무 연계가 없는 시민·사회단체들도 미국의 간섭과 냉전 반공주의 독재에 반대해 자주적으로 제기해 온 역사적 요구들이다. 무엇보다, 진보와 노동운동의 자주적 활동을 북한 지령에 따른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근본에서 노동계급의 자주적 사고와 실천 능력을 부정하는 엘리트적 발상이다.

실사 일부 좌파가 북한 지배자들의 사상에 동조했다라도 그들이 북한 지배자들과처럼 특권적 지배층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므로 그들과 함께 취급될 수 없고, 또한 그런 사상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에서 허용돼야 한다.

둘째, 법무부는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나라'라는 표현과 '소수의 특권계층의 정치적 특권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

다는 것도 국민 주권 원리를 위반한 체제 부정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진보당의 사상과 강령, 활동이 일관되게 노동자·민중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노림수

진보당 부설 진보정책연구원 박경순 부원장은 9월 <진보정치>의 강령 해설 논평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반대·배격하는 이념이 아니라, 현실 자유민주주의가 형식상 다수결 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인구의 다수인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이라

는 사상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정당한 호순은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이 헌법 제1조가 표방한 국민 주권의 원리와

진보당 강령 위한 규정이 무리수라고 증언하는 이유다.

진보당 지도자들 다수의 실천에 관해 말하자면, 패권주의 방식과 초계급적 민중주의 전략이 문제가 돼 오긴 했지만, 의도 면에서 보면 노동자·민중 운동의 건설과 전파에 헌신해 왔다.

그러므로 법무부가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사상과 실천을 문제 삼는 것은 좌파 단속이라는 이 사건의 노림수와 성격에 부대로 보여 준다.

사실 자유민주주의가 형식상 다수결 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인구의 다수인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이라는 사상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정당한 호순은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이 헌법 제1조가 표방한 국민 주권의 원리와



11월 7일 청와대 앞에서 막힌 통합진보당의 항의 대열.

오히려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회의 현실은 1퍼센트 소수 특권층이 다수 대중을 체계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으로 날카롭게 분열된 계급사회다. 그래서 국민주권은 현실에서 기껏해야 4년이 나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선거 때 보통선거권의 형태로 보장될 뿐이다. 그런데 이 보통선거로는 법무부가 보호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표방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경제권력(사유 재산권)"에 대해서는 손도 댈 수 없다.

그러나 바로 그 '국민주권'의 형식과 그 실질 내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경제권력(사유 재산권)"에 대해서는 손도 댈 수 없다. 그러나 바로 그 '국민주권'의 형식과 그 실질 내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경제권력(사유 재산권)"에 대해서는 손도 댈 수 없다.

2004년 이후 대중적 촛불운동이 번질 때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가사로 한 노래가 대표곡이 돼 왔다. 따라서 법무부가 '국민주권' 사상을 계급 지배 논리로만 해석해 좌파를 단속하려는 것에 동의해선 안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이런 모순적인 국민주권 사상이 아니라, 소수 특권계급이 독점한 정치·경제 권력을 해파하고 노동자·민중이 권력을 가지는 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비할 데 없이 긴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소수를 위해 전정이나 환경 파괴 산업, 국경원 따위의 탄압·협박 기구에 사회의 부와 인력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

기존 지배자들이 이런 사회 변혁에 대해 별 일 저항이 분쇄된다면, 이런 민주적 사회는 더는 억압적 국가기구를 필요로 하지도 않을 것이다. 진보당 해산 시도는 바로 이런 민주적 변혁 사상에 대한 토론회와 상상의 자유를 막으려는 것이다.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계급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반민주 작태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망스러운 마녀사냥 굴복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권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의심케 만드는 실망스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박원순 변호사는 모종의 온건 PD(민주민주주의 계열) 입장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그는 실령 특정 사상이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배척당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정치 세력의 정치활동 허용이아랄로 민주주의의 진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얼마 전 그는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용인하는 발언을 했다. 그것도 하필이면 '광주항쟁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채널A)에와서 말이다. "독재 시절과 지금은 상황이 바뀐'에 인권도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라는 것도 ...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기초적 조건'이라고 했다. "서울시장이 된 후 재야 인권변호사 시절과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했고,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정착되고 있다"는 기이한 '해석'을 내놔다.

심지어 그는 '종북'이라고 탄압받고 있는 <자유민보>의 폐간을 법원에 신청하기로 했다.(인터넛 언론은 지지체가 등록·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등 우익의 종북 마녀사냥 광기가 돌아치는 가운데 사실상 이에 굴복한 것인데, 그가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이론적 권위자였다 는 점에서 배신이기도 하다.

박원순은 '시대가 바뀌었다'지만 오히려 파변건 그다.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등 박근혜 정부와 우익의 종북 마녀사냥이 극에 달한 요즘이야말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단호하게 해야 한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본질은, 그도 말한 바 있듯이, 국민들을 "주눅 들게" 하고, 국가 안보를 빌미로 "사회"의 모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과 해결책 제시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부당한 비난 압력 때문에 수동적으로 굴복한 것만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나 온건 개혁주의의 정치 운동은 기존 국가의 틀 안에서 — 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 이상을 현실화시키려 (헛되이) 애써 왔기 때문이다.

박원순의 이런 행보는 "(박근혜) 국가비전 이 내가 해 왔던 일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종북 시비에서 벗어나, 중도계 부동층의 표를 얻는 것을 염두에 둔 듯하다.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데 편승하거나 도전하지 않는 전략은 결국 우익을 강화시킬 뿐이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에게 무비판적 태도로 협력을 추구하려 해 왔던 노동운동 일부의 태도도 고정돼야 한다.

우파의 배심제 هل뜰기

배심제 재판을 받는 것은 권리다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박근혜와 그 측근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비방'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사인과 '나름수' 진행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들이 국민참여재판을 '감성 재판',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몰아붙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학용은 안도현 사인의 재판이 "문재인 후보가 물표를 받았던 전주"에서 진행될 것을 문제 삼으며 "정치 재판"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권성동도 "정치색을 띠고 있는 사건은 절대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법리가 복잡해 법률 전문가도 유무죄를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일반인들은 판결할 능력이 없고, "참가한 배심원단의 심정적 상태와 법원의 소재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 국민참여재판은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법무장관 황교안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런 우파의 هل뜰기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직접 법관은 과연 정치에서 '독립'해 있는 집단인가? 2009년 대법관 신영철은 촛불 집회에 참석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재판을 '법대로 빨리 처리하라'고 판사들에게 압력을 넣어 논란이 됐다.

당시 대법관 박시환은 "재판 개입은 유신과 5공 때부터 계속돼 왔던 것"이라며 사법부와 집권 핵심 세력의 오랜 유착 관계를 폭로한 바 있다.

사실 최고 법원의 법관(대법관) 임명권 자체가 대통령에게 있다. 그래서 대개 대법관은 보수적이고 친정부적인 인사 일색이기 마련이다.

게다가 사법부는 위에 구조로 짜여 있어서 '피라미드' 속에서 승진을 신청 써야 하는 직업 법관이야말로 외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전문성을 이유로 배심원제를 비난하는 것도 엘리트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재판은 단지 기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노동계급의 삶을 잘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정치적'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적 사건일수록 평범한 사람들의 "감성"과 상식을 반영해야 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정치적 사건은 참여 재판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민주적 권리

배심제는 1215년 영국에서 '마그나 카르타(대헌장)'로 확정된 뒤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인정받았다. 그 후 배심제는 부르주아 혁명을 거치면서 전 유럽으로 확대됐다. 이전 재판은 민중에게 가혹하고 불리하기 일췌였으므로 혁명 이후 '시민에 의한 법 지배'를 확립했던 것이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수레의 두 바퀴"는 "보통선거와 배심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혁명 패배 시기나 나치가 권력을 잡았을 때 배심제가 후퇴·폐지되기도 했지만, 대체로 형태를 달리해서 대다수 나라에 정착했다.

물론 배심제가 최상의 사법 제도는 아니다. 배심제를 채택하는 미국의 사법 제도 역사를 보면, 백인이 흑인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 받지 않는 일이 허다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자체가 부자에게 유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권력과 돈이 없는 사람들이 피고인이 되고, 작은 잘못을 해도 큰 벌을 받는다. 자본주의에서 사법부는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일부로, 엄격한 위계제로 짜여져 상층부의 통제를 받는다.

그럼에도 배심제가 더 나은 제도임은 분명하다.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법원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가 조금이라도 더 있고, 판사 1인이 모든 것을 판단·결정하는 것보다 노동계급의 삶의 경험을 공유하는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리는 게 더 민주적이다.

직접 법관을 자본가와도 얹히고설켜 있어. 삼성·현대·LG·SK 등 재벌들은 원만한 국내 대형 로펌보다 많은 변호인을 고용하고 있고, 여기에 판·검사 출신들이 넘쳐난다. 인사청문회에서 법무장관 황교안도 검찰을 떠난 뒤 대형 로펌에 들어가 한 달에 평균 1억 원 이상의 돈을 벌었음 이 드러났다.

현재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영·미의 배심제에 견줘도 한참 못 미치는 제도다. 배심원 숫자도 더 적고, 판결을 해도 구속력이 없어서 판사가 무시하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지금 우파는 사법개혁의 일부로 시작된 이 쥐고 리만한 개혁 조치마저 뒤엎리고 싶은 것이다.

오히려 배심원 판결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배심원 수 증원, 배심 재판 기간 임금 지급 의무화 등 현재의 국민참여재판에 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권한을 갖도록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김지윤

성지현

전투적 민주주의 — 사이비 민주주의 이론이자 보안법 옹호론자들의 궤변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는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정당화한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해 정당을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시키는 게 [방어적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방어적 민주주의, 즉 전투적 민주주의는 1930년대 독일의 칼 뢰벤스타인, 칼 만하임 등이 주창한 사상이다.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는 없다'는 생각에 기반한 이 사상은 1949년 서독 기본법에서 처음 성문화됐다.

서독 헌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폐지하려는 정당은 위헌"이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공격하기 위해 이를 남용하는 자는 기본권의 효력을 상실"하며, "연방의 존립과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의 위협에 대해 방지"한다고 명시했다.

개념 원리

한국의 헌법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헌법 8조 4항)

그런데 이때의 '민주적 기본질서'가 무엇인지는 매우 모호하다. 지배자들은 현 법을 그 기준으로 내세운다. 헌법에 충성하며 국가 체제를 존중하는 세력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특권 계급의 질서를 옹호한다. 이 때문에 전투적 민주주의는 지배자들이 좌파를 탄압하는 무기로 사용됐다.

특히, 정부만이 정당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증오하는 정당은 사실상 언제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이라는 진보당 강령의 이념이 헌법의 국민주권에 반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해산 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투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적 권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사상이라는 게 결정적인 문제점이다.

이 사상에 따르면, 당장의 가시적 위협이 없더라도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탄압할 수 있다. 마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미래의 위험성을 예측해 처벌하는 것과 비슷하다. 사람들의 머리 속을 뒤져 사상을 단속하고 합법적으로 탄압할 수 있

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전투적 민주주의는 국가보안법의 존치 논리가기도 하다.

이런 논리에 따라 헌법 76조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대통령이 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국가 탄압의 근거를 제시한다. 계엄 선포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보장된다. 한국의 역대 독재 정권들은 이와 같은 헌법 조항들을 근거로 노동자·민중 운동을 탄압해 왔다.

정당 해산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도 결코 중립적 기구가 아니다. 현재는 선출되지 않은 국가기구로 보수적 편사 일색이다. 현재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박근혜는 공안검사 출신 박한철을 그 자리에 앉혔다. 실제로 현재는 무수히 많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 현재는 1990년 국가보안법 합헌, 교사 정치 활

동 금지, 사립학교 교사 노조 금지,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군대 내 동성애 처벌 등 온갖 보수적 판결을 내렸다.

역사적 경험

서독의 역사적 경험은 전투적 민주주의의 진정한 목적을 분명히 보여 준다. 서독이 전투적 민주주의를 도입한 배경에는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동·서 제국주의 간 경쟁인 냉전과 독일의 지정학적 조건이 있다.

냉전 초기인 1949년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를 결성하고 서독을 거기에 편입시키고자 했다. 그에 따라 서독의 재무장이 필요해졌다. 그러자 1950년 대 서독에서 재무장 반대 대중 운동이 벌어졌다. 독일공산당(이하 KPD)도 이 운동의 일부였다. 서독 정부는 1950년에 '반체제적 활동 감시'를 강화했고, 이들

해 재무장 반대 국민투표도 금지했다.

이윽고 신나치 정당이 사회주의제국당(SRP) 해산소송을 제기하고, 얼마 뒤에는 KPD 해산소송을 제기했다. "극우만이 아니라 극좌도 헌법의 적"이라는 것이다. KPD는 1949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15석을 얻은 정당이었음에도 서독 정부는 KPD가 '말스·레닌주의를 따르고 폭력혁명의 목적으로 권력을 탈취하고자 한다'며 정당 해산소송을 청구했다. 1956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결국 KPD를 해산시켰다.

KPD가 강제 해산당하자 서독의 재무장에 반대한 세력들에 대한 탄압은 더욱 극심해졌다. 정부에 반대하는 주장과 유언을 배포 등 반정부 활동이 금지됐다. 공산당과 관련이 있다는 혐의만으로 언론사와 인쇄소들이 폐쇄되고, 활동가들은 수사 대상에 올랐다.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쫓겨났고 마르크스주의 토론도 금지됐다. 제국주의 질서 재편에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들을 '체제 방어'를 명분 삼아 제거했던 것이다.

현실

지금 새누리당도 진보당에 이어 '종북' 시민단체 해산까지 추진하겠다고며 엄포를 놓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한미FTA 반대 운동에 종북 딱지를 붙여 온 자들이나 진보적 시민단체도 해산시키겠다는 뜻이다.

이 나라이에서 우익이아말로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해 온 세력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정적인 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고 당시 조봉암을 사형시켰다. 박정희 역시 유신헌법으로 독재를 정당화하고 인혁당 '사법 살인'을 벌였다.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집권한 전두환도 민주주의를 밟고 올라서 권세를 누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하는 물음이 거리에서 터져나왔다.

맺으며

착취와 억압에 기반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피억압자들에게는 삶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

막가는 박근혜, 노동운동이 막아야 한다

김문성

박근혜는 10월 내내 불편한 한 달을 보냈다.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정치공작과 선거개입의 실체가 며칠에 한 건씩 드러났고,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정권 내부에 균열이 생겼다.

정권 탄생의 절차적 정통성도 의심받는 판국에, 당선을 위해 급조해 내놔던 각종 복지 공약을 대놓고 파기하다 보니 60퍼센트가 넘는 지지율도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에 대한 박근혜의 답은 부패한 자들로 친정체제를 더 강하게 구축하는 것이었다.

검찰총장에 김기춘 라인의 김진태, 감사원장에 김기춘과 동향인 판사 황찬현, 새 복지부 장관에는 국민연금 개악과 의료 민영화에 찬성하는 문형표를 내정했다.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에 김진태는 부동산 투기, 로펌 고액 수수 의혹이 나왔고, 나머지 둘도 세금 체납과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됐다. 가히 박근혜의 부름을 받을 자격을 갖춘 자들이다.

박근혜는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장도 공안통으로 교체했다. 꺾끄러운 수사 라인을 다 쳐내고는 이제 와서 의혹과 문책을 “수사 결과에 맡기고 기다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을 못 믿게 만들어 놓고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모순이 사람들에게 쉽게 먹힐 리 없다. 그러니 실제로는 더욱 강성우파적 대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마침 10·30 재보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여세를 이용해 공세를 강화하려고 한다. 재보선에 참패해기가 죽은 민주당도 ‘이석기법’*에 합의하며 박근혜에게 힘을 실어 줬다.

그러나 애초 승패가 뻔한 곳에서 이긴 선거가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낼 순 없다. 그러니 일시적으로 힘이 실렸을 때 공세의 꼬베를 쥐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탄압과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급하게 서둘렀다고 보는 이유다.

박근혜가 공무원노조를 문제 삼자 검찰은 곧바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를 시작했다. 정부는 총체적 우파 공작으로 집권한 정부답게 ‘물귀신’ 작전도 조직적으로 펼친 것이다.

곧이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헌법 재판소에 청구했다.

박근혜가 이런 사법 탄압으로 노리는 목표는 명백하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 내핍 강요 본격화를 앞두고 저항의 싹을 죽여 반동의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안전을 위해 강성우파식 법질서 통치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이 아무



감춰지지 않는 국가기관 선거 개입, 수구러들지 않는 비판의 목소리.

리 우파적이라도 노동·민중 운동에 강력한 기반이 있고 자력으로 국회의원도 만들 수 있는 대중적 진보정당을 행정 절차와 판결만으로 해산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다양한 진보단체들이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탄압을 지속해도 박근혜가 반동의 본편을 시작하려 할 때가 오히려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절차적 정통성에 불신을 받는 정권이 대중적으로 인기 없는 정책, 즉 고통전가와 내핍 정책을 본

격화하는 것이 축적되는 불만에 저항의 불씨를 당기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영화, 연금 삭감, 고용 ‘유연화’ 등 내핍과 고통전가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야 할 조직 노동자들의 운동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이런 위협을 모를 리 없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민주당에게 국가 정체성과 헌법에 대한 충성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다. 각종 내핍과 반동 조치들을 번번히 않으나 ‘국민적 합의’로 포장할 수단, 즉 국회에서의 처리라는 모양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법 수호?

민주당은 올해 내내 친자본주의 정당으로서 그 한계를 보여 왔다. 우파의 ‘종북’, ‘대선 불복’ 프레임에 말려 NLL 대화록 몰타기, 통합진보당 마녀사냥,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등에 굴복해 왔다.

우파가 이런 공격들을 통해 각인시키려 해 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바로 반공주의적 자유시장 자본주의 체제 질서를 뜻한다.

냉전 초기 독일 헌법에서 베낀 것이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과 용어가 한국에서는 유신헌법에서 처음 등장했고, 이 유신헌법 기초 작업에 참여한 김기춘이 지금 정권의 실세라는 것도 시사적이다.

이 자본주의 지배 질서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이해관계가 별반 다르지 않다. 민주당이 최근 대선 불복론에 맞설 새 프레임이라고 들고 나온 ‘헌법 불복론’이 진보세력에게 그다지 쓸모 있는 것이 못 되는 까닭이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우익이 ‘헌법’ 운운하며 방방 드고 있는 것을 보라.

헌법이란 그 나라 통치자들이 서로 약속한 활동 규칙들의 총체다. 다만 그것을 만들고 개정할 때 당시의 계급 세력균형이 일부 반영될 뿐이다. 그래서 군사 독재가 강력할 때 만든 유신헌법보다는 1987년 노동자·민중의 항쟁의 여파로 개정된 헌법이 조금 더 민주적인 것이다.

모순

그럼에도 그 계급적 본질 때문에 ‘87년 헌법’조차도 일관된 체제 수호 논리를 기초로 해, 노동자·민중의 민주적 권리에 대한 서로 모순된 규정들이 조합돼 있다.

어느 조항들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보장하지만, 또 다른 조항들은 ‘국가안보’란 명목으로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자의적 제약을 가능하게 해 놓았다. 가령 국가보안법의 최약

특검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편, 국가정보원이 유일한 깃털인 줄 알았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은 갈수록 다채로운 깃털들이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에 이어 행정안전부와 노동부의 대선 개입도 드러났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공작은 이미 2008년부터 시작됐고, 국정원과의 연계 속에서 이뤄졌다는 것도 새로 밝혀졌다.

이쯤 되면 이 총체적 부패 행위들의 꼭대기에 이명박과 박근혜가 있음에 틀림없다고 보통 사람들이 볼 만도 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원 개입 여부에도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이후 마녀사냥으로 선관위노조를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키고 사실상 와해시켰다.

이런 의구심들이 이제는 합리적 의심이 되고 있다. 박근혜가 갈등 끝에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찍어낸 것도 더욱 의문을 증폭시킨다. 진실 규명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커지는 이유다.

미약하나마 진실의 일부를 캐냈던 검찰 수사라인이 정권의 처내기로 붕괴한 마당에 특검 요구는 자연스럽고 정당하다.

박근혜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언급한 것도 이런 특검론을 경계하려는 포석이었다.

그러나 특검에 대한 바람이 커진 것은 박근혜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검찰을 못 믿게 만들어 놔으니 말이다. 게다가 지난 대선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상설특별검사제’를 공약했던 박근혜가 특검 요구를 거부할 명분도 없다.

특검 요구에 동의하지 않던 정의당은 특검 요구로 선회하며 야당들이 공동으로 특검을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안철수와 민주당이 연이어 특검 요구 대열에 합류했다.

정의당과 안철수 쪽은 국정원 개혁 방안도 공동으로 낼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새누리당 김태흠이 안철수의 특검 요구 기자회견을 두고 ‘3권 분립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전형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발언이다.

새누리당이야말로 최근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 무죄 판결 등을 두고 ‘종북 판사’ 운운했던 자들이다. 또한 특검은 법을 만들어 하는 것이므로 이를 요구하는 것이 3권 분립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특검이 진실을 밝히기는 힘들다. 검찰도 처내는 마당에 제대로 된 특별검사를 박근혜가 임명해 줄 리도 없다.

이런 약점들 때문에 그동안에도 특검이 정치·경제 권력의 핵심을 제대로 파헤친 사례가 없다.

국가권력이 동원된 음모와 공작은 국가기구가 분열해 내부 제보자가 생길 때 가장 효과적으로 폭로되곤 한다. 국가기관의 내분이 밖으로 표출되도록 하는 것은 주로 대중운동의 힘이다.

국회 바깥에서 독립적으로 벌이는 운동, 특히 조직 노동운동이 중심이 돼 박근혜 정부와 우파 단결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때만 저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며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

공무원노조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총체적 선거부정의 주범이 벌이는 물귀신같은 탄압

‘국정원 게이트’ 특별수사팀장이던 윤석열은 국정원 트윗 5만 5천여 건을 밝혀 내며 “유례를 찾기 힘든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최근에는 국군사이버사령부까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 정보를 갖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사과’는커녕 “국정

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발뺌하며 온갖 몰타기를 해 왔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는 몰타기를 넘어서 물귀신 작전에 나서기 시작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11월 8일 검찰은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지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진정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는 게 누구인가! 바로 박근혜 정부이고 국정원, 국방부, 검찰 아닌가!

하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정권의 하수인이기를 거부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워 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대선에서도 공개

적으로 민주당과 진보정당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맺었고, 노조가 발행하는 신문에도 당당히 이 사실을 알렸다.

이것이 어찌 국가기관의 은밀하고 불법적인 대선 개입과 선거 부정에 비교할 일이란 말인가!

당시 박근혜는 공무원노조의 정책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았고, 정책협약도 거절했다. 하지만 결국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노조 총회에 새누리당 심재철을 보내서

지지 메시지를 발표하며 표를 구걸한 바 있다. 그레놓고 이제와서 ‘공무원노조가 정치 중립을 어겼다고 공격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과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몰타기이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역겨운 수작이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횡포와 탄압에 맞서 공무원노조는 단호히 투쟁할 것이다.

양윤석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이석기법’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면, 해당 의원의 수당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박탈하겠다는 악법을 만들려 한다.

노동·정치·연대 출범하다

11월 2일 ‘노동·정치·연대’가 출범했다. 노동·정치·연대는 노동정치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노동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만든 중앙추진체다.

연석회의에는 공공운수연장조직(준),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정당추진회의, 노동포럼, 전국현장노동자회, 혁신네트워크 등 7개 단체가 가입해 활동해 왔다. 노동·정치·연대는 전국에서 더 많은 단체와 개인들의 가입을 받을 계획이다.

이들은 노동기본권과 고용안정 보장, 민영화 중단, 보편복지, 한미FTA 등 신자유주의 경제협정 폐기, 노동약법·반민주약법 폐기 등 노동계급의 당면 문제 해결을 기본 과제로 내놓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 진보정치의 분열로 ‘각개 기어가기’가 노동조합의 투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다. 그것은 또, 공식 정치에서 진보정치의 존재감을 왜소화시켰다.

이런 상황에 비춰 보면, 민주노총의 전·현직 지도자들과 노동운동가들이 모여서 노동계 정당을 재건해 노동자 정치운동의 사분오열 상황을 극복하자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날 출범식에 권영길·단병호·이수호·임성규·신승철 등 민주노총 전·현직 위원장들과 정의당·노동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것도 노동자 정치운동의 단결 염원을 보여 준 것이다.

물론 걸어온 길보다 갈 길이 더 많이 남아 있다. 진보정치 운동의 분열이 남

긴 정치적 상처가 아직도 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동·정치·연대의 출범은 노동운동 내 주요 지도자들이 진보정치의 분열과 그로 말미암은 주변화를 극복하려고 나서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배신의 역사?

한편, 일부 좌파는 민주노동당과 제1기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역사를 지도자들의 배신으로 점철된 역사로만 평가한다.

물론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노무현 정부와 일부 노조 지도자들의 배신에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또, NL계 지도부가 ‘묻지마 야권연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한 것도 잘못이었다.

그러나 ‘올바른 대중과 배신적 지도부’라는 구도로만 사태를 설명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확하지도 않다.

이런 관점으로 우여곡절 속에서도 2007년 무렵까지 선진 노동자들 속에서 이 당이 성장했고, 또 선거적 성공이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신감을 고무하기도 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배신적 지도자’론은 개혁주의를 지지했던 대중을 결국 수동적 허수아비로 보는 일종의 엘리트주의로 빠질 뿐이다. 올바른 강령으로 무장한 좌파가 우파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지도권만 잡으면 노동운동의 정치적 약점들이 바로잡힐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런 발상은 종파주의와 선전주의로 빠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배신과 음모로만 설명할 수 없다. 개혁주의는 체제 안에서



노동계 지도자들이 노동자 정치 운동의 재편과 단결을 향해 나서다 11월 2일 노동·정치·연대 창립식.

겪는 노동자들의 소외, 즉 자신들이 사회를 집단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경험과 생각에 기초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개혁주의를 벗어나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종파적·선전주의적 태도가 아니라 개혁을 위한 투쟁 속에서 대중 자신이 자신감과

조직을 구축해 가는 과정 속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 좌파가 대중과 교류하며 실천 경험 속에서 올바른 길을 입증해 가는 끈기 있는 노력과 과정이 필수적인 것이다. 바로 이런 과정을 회피했기 때문에, 2000년대 내내 민주노동당 바깥에서 그저 선전주의적 비판에 주력했던 일부 좌

파들은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민주노동당 분당 후에 생긴 정치적 공백을 노렸던 일부 좌파들의 실험이 실패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경험뿐 아니라 그 바깥 좌파의 경험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

김문성

세계경제는 또 다른 2008년 9월을 향하는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는 막대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연준이 양적완화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던 지난여름에는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신흥국들로 다시 자금이 유입됐다. 큰손들이 다시 신흥국의 주식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인도·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바닥까지 떨어졌던 통화 가치가 다시 상승했다.

그러나 양적완화 정책은 지난 수년간 주식, 부동산, 금융상품 등에서 거품을 키웠을 뿐, 실물경제를 회복시키지는 못했다.

이윤율

미국 경제의 경우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경제지표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고용가능인구의 노동시장참가율이 1978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회복이 더디다. 미국의 비농업 분야 고용은 2007년 말에 전취 1백70만 명이나 적다.

실물 경제는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마약에 중독된 듯 값싼 이자에 의지해 경제가 굴러갔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자본주의의 불안정과 모순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첫째, 2008년 경제 공황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부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다.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국내총생산(이하 GDP) 대비 비금융부문 부채 비율은 2007년 3월 2백80퍼센트에서 2013년 6월 3백12퍼센트로 늘었다. 미국과 영국은 가계 빚이 다소 줄었지만, 27개 주요

국가의 GDP 대비 민간부문 빚 비율은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하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자본이 빠져 나가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기업과 가계의 부실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빚을 갚기 위해 서둘러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져서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추축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낮은 이윤율이라는 근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최근 JP모건 이코노미스트들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유럽과 개발도상국에서 기업들의 수익률은 떨어졌다. 미국의 수익률은 1년 반 동안 정체 상태였다. 수익률은 공황이 시작되기 전인 2008년 2월에는 13퍼센트였지만 2012년에는 7퍼센트에 불과했다. JP모건이 계산한 기업의 수익률이 마르크스주의적 의미의 이윤율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추세를 볼 수 있기는 하다.

겨우겨우 이자만 갚으며 운영하는 ‘좀비 기업’이 상당하다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게다가 개발도상국 경제의 불안정성도 2008년보다 더 커졌다. 제3세계 여러 나라들은 2008년 위기 이후 외채를 빌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썼고 이 때문에 외채가 상당히 많아졌다. 그래서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해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신흥국의 경제 위기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BIS의 전임 수석 이코노미스트 윌리엄 화이트는 높아진 부채와 개발도상국의 거품 등을 볼 때 최근 상황이 “2007년의 상황이 더 나빠진 상태로 돌

아오는 듯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세계경제는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경기침체가 발생하느냐 하는 선택지 앞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모순을 키우고 있는 한국 경제

한국 경제도 세계경제와 비슷하게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흥국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한국에도 외국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주식 시장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채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국가, 기업, 가계의 부채를 합친 국내 총부채는 2007년 2천3백98조 원이었는데, 2012년까지 1천1백45조 원이 더 늘

어 5년여 만에 47.8퍼센트 증가했다.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전세난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늘고, 기업들에 세금을 감면해 주고 부자에 퍼주기 하는 정책 때문에 국가 부채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삼성과 현대차를 제외하고 대다수 재벌 그룹의 수익성도 악화하고 있다. 자산 규모 상위 20대 그룹 계열사의 영업이익률은 2008년 6.3퍼센트에서 2012년 5.6퍼센트로 줄었다. 삼성 그룹은 2008년 6.2퍼센트에서 2012년 10.4퍼센트로, 현대차그룹은 2008년 6.3퍼센트에서 2012년 7.7퍼센트로 늘었음을 감안하면 하위 재벌들의 수익성 악화는 20개사 평균 하락폭보다 더 큰 폭일 것이다.

기업을 운영해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이 상장사의 18퍼센트에 이른다.

정부는 막대한 돈을 풀어 거품을 떠받치고, 기업 퍼주기 정책을 해 왔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거품만 키워 온 것이다.

이제 더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거품 떠받치기, 부자 퍼주기가 아니라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돈을 쓰도록 밑에서 압박해야 한다.

특히,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10대 재벌의 현금성 자산이 크게 늘어 1백24조 원에 이른다. 바로 이런 돈이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노동계의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

정선영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노동자연대다함께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노동자연대다함께
(<http://workerssolidarity.org>)

울산 지회
오바마, 아베, 박근혜 시진핑, 김정은... 무엇이 동아시아 긴장과 갈등을 부추기는가? — 마르크스주의의 설명
연사 : 김영익(레프트21) 기자
일시 : 11월 14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울산시민연대 교육관
참가비 : 3,000원(학생 2,000원)
문의 : 010-5004-1880

인천 지회
마르크스주의와 복지 — 어떤 복지를 누구의 돈으로 할 것인가
연사 : 장호중(레프트21) 기자
일시 : 11월 15일 (금) 오후 7시 30분
참가비 : 민주노총 인천본부 1층 강의장
참가비 : 일반 2,000원(학생 1,000원)
문의 : 010-2816-7181

서울 동부지구
박근혜 정부의 복지 먹튀와 대안 논쟁 — 어떤 복지를 누구의 돈으로 할 것인가
연사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강과 대안 부대표)
일시 : 11월 14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여성능력개발원 (건대입구역 6번 출구) 3층 2강의실
참가비 : 3,500원(학생 2,500원)
문의 : 010-9840-1236, 010-9453-5318

부산 지회
국정원 선거 개입과 매녀사냥 등을 통해 보기 — 국가란 무엇이고 어떤 구실을 하는가
연사 : 차승일(레프트21) 기자
일시 : 11월 28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서면 러닝스퀘어 2번 강의실
참가비 : 4,000원(학생 3,000원)
문의 : 010-2008-0588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의 잠재력을 보여 준 티브로드 투쟁 승리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통쾌한 승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잠재력을 보여 줬다.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조를 조직해, 무려 34일 동안 파업 대열을 단단하게 유지하고 과감하게 본사 점거 농성까지 불사하며 원정을 직접 압박했다.

이로써 노조 탄압으로 악명 높은 원정태광그룹으로부터 평균 23퍼센트(45만원)의 높은 임금 인상, 월 10시간가량 노동시간 단축, 노조 활동 보장 등 인상적인 성과를 얻어냈다. 그리고 이런 성과는 지금 조직 확대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 전국의 7개 센터에서 신규 분회가 생겼고 조합원이 1백 명 넘게 늘었다.

지난 6일 티브로드 본사 앞 승리 보고 대회는 바로 이런 성과 속에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자신감을 드높이며 전진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 줬다. 이시우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파업 전부터 우리가 승리하면 연대로 보답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티브로드지부는 앞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곳이면 전국 어디라도 달려가 연대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환호가 터져 나왔다. 티브로드 노동자들은 이미 곳곳을 누비며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고 힘을 불어넣고 있어, 더욱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연대의 깃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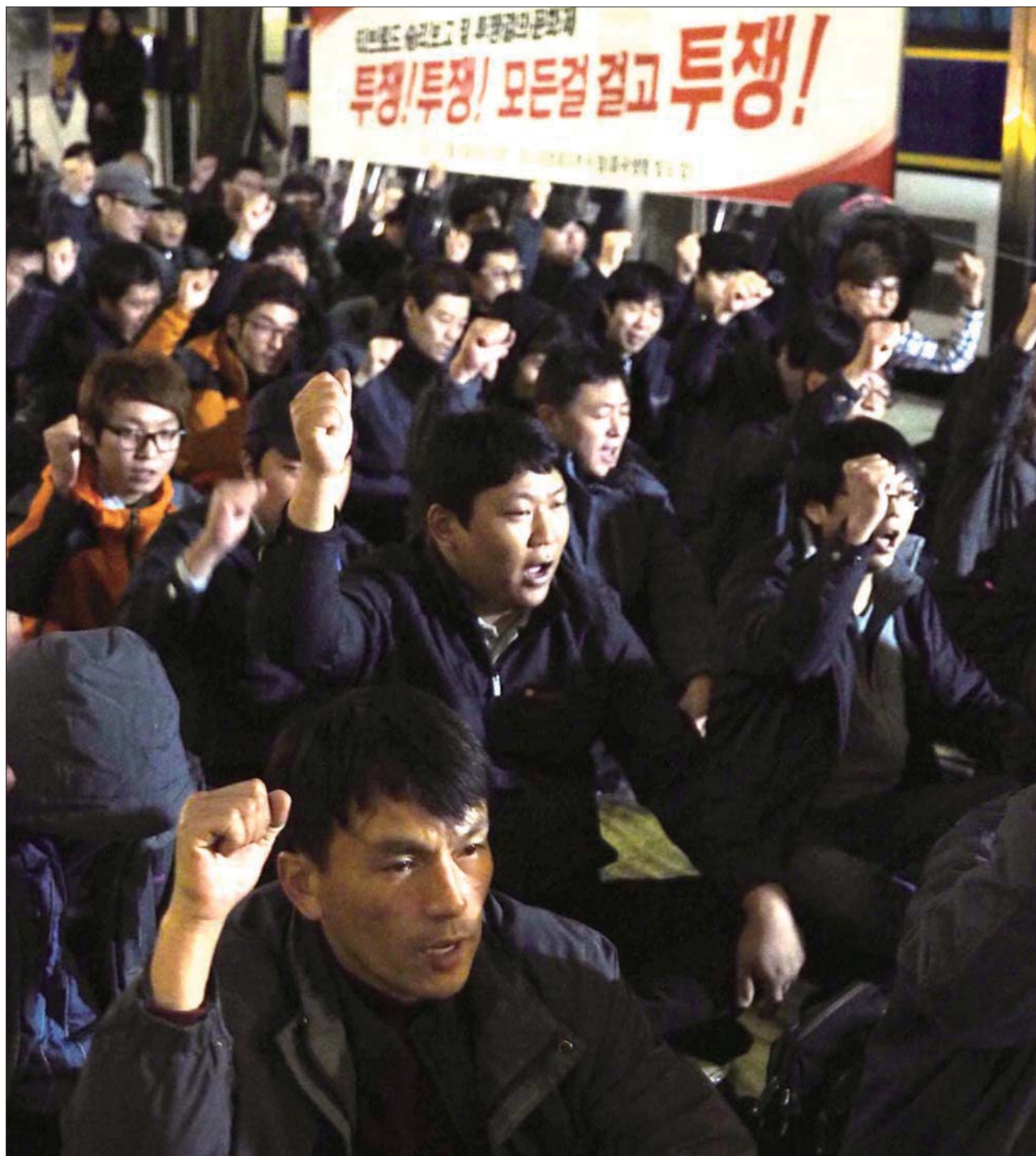
특히 이날 집회에는 이번 투쟁 승리에 자극받아 새롭게 노조에 가입해 참가한 노동자들도 주목을 받았다. 최근 집회를 결성한 전주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앞서 싸운 선배들이 있어, 우리도 편하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설렙니다. 선배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앞서 싸운 ‘선배’들은 어떻게 노조를 조직하고 승리할 수 있었는지 말했다.

“우리는 남양유업의 ‘갑을 논란’과 씨엔엠 투쟁 등을 보면서 자극을 받았습다. 몇 개월 사이 조합원이 4백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의 탄압으로 탈퇴하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



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는 티브로드 투쟁 승리 11월 6일 티브로드 투쟁 승리 보고 대회.

고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로 파업에 들어갔는데, 견고하게 대열을 유지하고 본사까지 점거해 승리했습니다.” (정화목 문화선전국장)

“점거에 들어갔을 때, 창문으로 연대하러 온 분들과 깃발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를 응원하러 달려온 것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연대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김홍수 성동광진지회장)

티브로드 노동자들이 말하듯, 이번 티브로드 투쟁은 지난 몇 년간 확대돼 온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의 일부다. 현대차 비정규직, 대학 청소노동자, 학교비정규직 등 곳곳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화하고 투쟁하며 노

동운동을 자극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티브로드 노동자 투쟁의 승리는 삼성전자서비스, 우체국택배 등 투쟁에 나선 많은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다. 이번 투쟁 승리가 노동운동 전체에 기쁘고 반가운 소식인 까닭이다.

유병규·조영지

13년 만에 첫 부분 파업에 나선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

11월 1일, 인천국제공항의 청소·설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시간 부분 파업을 했다. 인천공항 개항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인천공항에서 열린 집회에는, 합법적 쟁의권을 얻은 청소·설비 지회뿐 아니라 전력·탐승교·부대교통 등 다양한 지회의 노동자 7백여 명이 모였다.

인천국제공항은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보여 주는 상징적인 작업장이다. 공항을 운영하는 노동자의 87퍼센트가 간접고용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저임금으로 고통받아 왔는데, 평균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38.3퍼센트밖에 안 된다. 이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10년을 일해도 1년차와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

고용도 불안하다. 노동자들은 용역업체가 바뀔 때는 물론이고, “몸만 아파도 바로 사직서를 써야” 했다. 최근에는 13년 근속한 노동자가 근무 시간에 과일을 깎아 먹었다는 이유로 해고되기도 했다.

근무 조건도 매우 열악하다. “공항 시설은 계속 늘어났는데, 일하는 인원은 그대로다. 나는 하루에 화장실 72칸을 청소한다. 사람을 더 배치해 달라고 애원해도 그냥 참으라고만 한다.”

그래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안정·근속수당 신설·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업체별 인원수, 임금, 근무 형태를 결정할 실질적 권한이 있는 ‘진짜 사장’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나서야만 한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불법파업’ 운운하며 협력업체를 방패 삼아 협박과 탄압만 일삼고 있다.

심지어 부분 파업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협력업체에 “불법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를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고용승계 약속서

이런 문제들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겪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지난 10년간 간접고용 노동자의 규모와 비중이 2배가량 늘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간접고용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인천공항 경비 노동자가 낸 불법파견 소송에서 인천공항공사 편을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투쟁은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세계적 공항 안에서 노동자 수백 명이 집회를 하는 것은 ‘공항 이미지 실추’라는 타격을 줄 수 있다.

최근 새로 들어온 한 협력업체는 토목지회 노동자들에게 고용승계 약속서를 써 주지 않으려 버티다가, 노동자들이 부분 파업에 돌입하자 약속서를 써 줬다.

앞으로 청소·시설 노동자들뿐 아니라 추가로 쟁의권을 획득한 지회의 노동자들까지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대변하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소은하

가스 민영화 저지에 나서는 노동자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들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는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7월 23일에는 가스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악안을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LNG의 95퍼센트를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독점 구조’ 때문에 우리 나라 천연가스 가격이 비싸다고 주장한다. 재벌과 가스공사가 경쟁하면 LNG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비슷하게 인접 국가와 천연가스 배관망 네트워크가 없고 천연가스를 전량 LNG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을 보면,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기업에게 천

연가스 수입을 맡긴 일본의 천연가스 수입 비용은 한국과 같은 수준이지만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갑절 이상이다.

또한 우리 나라는 가정용과 산업용 도시가스의 요금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일본을 비롯해 가스산업이 민영화된 나라는 가정용 요금이 산업용 요금의 갑절 이상 된다. 연중 일정하게 사용하는 산업용은 할인해 주고, 연중 사용량 편차가 큰 가정용에는 가스 가격에 할증요금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민영화되면 가정용 가스 요금이 갑절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벌들이 LNG를 수입한다고 가격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민영화된 석유산업을 봐도 알 수 있다. 대한석유공사(유공)가 전담하던 석유산업은 이제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같은 재벌들이 과점하고 있지만, 석유 가격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노동자·민중의 고통은 매우 커졌다.

지난 6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가스 민영화 법안을 저지한 바 있는 가스공사노동조합과 진보진영의 대응도 다시 시작됐다.

가스공사노동조합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는 11월 28일부터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 노동자들은 이번 입단협에서 실질임금 인상 문제도 중요한 요구로 삼고 있다. 다른 공기업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가스공사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부 때 대졸초임이 삭감되고 임금이 억제돼,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크다.

박근혜 정부가 해외 자본 개발 투자로 본 손실을 가스공사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을 악화시켜 떠넘기려 하는 것에 맞서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은 매우 정당하다.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등 민영화에 반대하는 단체들과 가스공사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가스 민영화를 막아 내고 임금 인상을 쟁취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위기 고통전개 정책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강동훈

추천 소책자



《돈보다 사람·안전·생명이다 —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강동훈 외 지음, 노동자연대다함께,
134쪽, 4,000원

전교조 교사들이 알면 유익하고 감동할 멕시코 교사들의 투쟁

긴축에 맞선 노동계급의 저항을 촉발하다

김준호

멕시코 교사들이 정부의 개악 조치에 맞서 반년째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2012년 12월에 임기를 시작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과 여당 제도혁명당(PRI)*은 우파 야당 국민행동당(PAN)과 손잡고 국영석유기업 페멕스(PEMEX) 민영화, 복지 예산 삭감, 식료품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개혁’안을 내놔다.

이 조치들과 함께, 정부는 “교육 전문화” 기치를 걸고 일련의 교육 ‘개혁’을 단행했다. 공교육 민영화, 일제고사·교원 평가 도입, 교육예산 삭감이 핵심 쟁점이었다.

새 제도에 따르면, 학생들은 3년에 한 번씩 일제고사를 쳐야 하고, 이 성적에 따라 교원을 평가해 답안 교사들이 감봉되거나 심지어 해고까지 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장년을 폐지하고 3년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교사들의 노동조건을 공격하는 이 개악은 수업 커리큘럼에도 영향을 줬다. 주로 원주민 거주 지역에서 지역적·인종적 특색에 맞게 짜여졌던 수업 커리큘럼은 축소·폐지 압력에 직면했고, 일제고사 시험 대비 위주의 “전문적” 교육 과정을 도입해야 했다.

이 조치들은 의회에 상정되기 전부터 여론의 광범한 반발에 부딪혔다.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공격받은 교사들뿐 아니라, 교육예산 삭감 때문에 아이들의 학교 전기세와 수도세를 직접 내게 된 (페냐 니에토는 가증스럽게도 이를 “학교 자주 관리”라고 불렀다!) 노동계급 학부모들도 개악안에 반대했다. 거대한 분노에 두려움을 느낀 국회의원들은 2월 26일 한 밤중에 균경 수천 명이 의사당 주변을 지키게 한 채로 개악안을 가결했다.

정부는 조합원이 1백50만 명이나 되는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노동조합인 전국교사노동조합(이하 SNTE)도 공격했다. 정부는 교사 임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 권리를 박탈하고 SNTE 위원장 고르디요를 구속했다. 중도 좌파 야당 민주혁명당(PRD)이 정부의 ‘개혁’을 지지하는 바람에 SNTE가 총파업 호소를 자제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신호탄

교사들은 SNTE 내 좌파적 노동자 그룹인 전국교육노동자조정위원회(이하 CNTE)를 주축으로 투쟁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개악이 긴축의 신호탄이며, 따라서 노동계급 전체



사진 출처: EMBASSY (멕시코)

“씩어 빠진 것은 교육제도다. 교사들을 탓하지 마라” 9월 11일 멕시코시티에서 파업 행진을 하는 교사들.

에 대한 공격이라고 옳게 주장했다. 그들은 동료 교사들뿐 아니라 학부모, 학생들에게도 연대를 호소했다.

CNTE는 ‘개혁’의 반노동계급적 본질을 폭로하며 노동계급의 투쟁을 호소했다. CNTE는 페멕스가 민영화되면 정부는 복지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며 교사들이 페멕스 민영화에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식료품 부가가치세 인상이 학교 급식뿐 아니라 노동계급 가정의 식탁도 공격하는 것이라며 건강하고 저렴한 식료품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싸우자고도 주장했다.

4월부터 CNTE 소속 교사들을 필두로 교사 파업이 시작됐다. 가난한 원주민이 많이 사는 산악 지방 헤레로 주(州)의 교사들을 필두로, 미초아칸 주의 교사들과 사파티스타 봉기*로 유명한 치아파스 주의 교사들도 차례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교사 수만 명이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의 중심부에 있는 소칼로 광장을 점거하고,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벌이며 힘을 과시했다.

8월이 되자 교사들은 개학을 거부하고 전면 파업을 확대해 나갔다. 2006년에도 오아하카 운동*을 주도했던 오아하카 주의 교사들이 개학 거부 투쟁에 동참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투쟁은 새로운 활기를 띠었다. 교사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뿐 아니라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도 자신의 요구를 걸고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부문을 넘어 많은 노동자들이 교사들의 파업 시위대와 함께 행진했다. 멕시코 시티의 소칼로 광장은 전국의 투쟁이 모이는 구심점이 됐다. 심지어 멕시코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인 베라크루스 주(州)의 교사 1만 명도 파업을 선포하고 광장 점거에 동참했다. 교사들이 국제공항과 멕시코시티를 잇는 고속도로를 봉쇄하자, 투쟁의 전투성은 한껏 고조됐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폭력으로 대응했다. 9월 13일, 전경 수천 명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해 소칼로 광장 점거를 진압했다. 멕시코 독립 기념 주간(9월 15~16일)에 노동자들이 수도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진압 과정에서 교사 수십 명이 다치고 연행됐다.

혁명기념탑

CNTE는 정부의 공격에 투쟁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멕시코시티 소칼로 광장 점거는 멕시코시티 혁명기념탑 앞으로 옮겨가 최대 2만 명이 함께하는 농성으로 이어졌다. CNTE 지도부는 전국 각지의 대도시 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9월 말, 교사 다섯 명이 우의 강파들에 살해당한 사건도 교사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10월 3일, CNTE는 교사들뿐 아니라

페멕스 민영화에 반대하는 석유 노동자들, 대중교통노동조합, 4년 전 대규모 구조조정을 당하고 계속 투쟁 중인 멕시코 전기노동자노동조합(SME) 등 1백70개 노동조합 대표단과 함께 ‘멕시코를 지키는 애국적 노동조합들’(이하 UPRN)이라는 연대체를 결성했다.

UPRN은 10월 12일에 수도 멕시코시티와 전국 27개 주에서 정부의 복지예산 삭감과 세제 개악에 맞서는 공동 행동을 조직해 함께 행진했고, 19일에는 전국 여러 고속도로의 도로 요금소를 점거하고 정부의 세제 정책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모든 자동차를 무료 통과시켰다. 이들은 10월 20일 민중의회를 기점으로, 긴축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어떻게 승리할지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CNTE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에서 비슷한 요구를 걸고 투쟁하는 교사들과 국제 연대를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성장하는 노동계급 투쟁에 맞서 멕시코의 세 주류 정당은 세제 개악도 추진하는 등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멕시코 교사들이 전투적으로 투쟁을 확대하려 노력한 덕에, 페멕스 민영화에 반대하는 투쟁 등 긴축에 맞선 여러 노동자들의 투쟁도 힘을 받아 성장하고 있다.

멕시코 교사들의 계속되는 투쟁은 멕시코를 넘어, 박근혜 정부 치하 남한 노동계급의 투쟁에도 많은 영감을 준다.

제도혁명당(PRI)

20세기 초 독재에 맞선 멕시코 혁명을 주도했던 정당의 후신으로 2000년까지 무려 71년 동안 멕시코를 통치했다. 부정부패와 국영석유기업 부패에 신자유주의 민영화에 대한 분노가 결합돼 결국 2000년에 야당에 정권을 내줬다. 2012년 대선으로 다시 정권을 잡았다.

사파티스타 봉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된 1994년 1월 1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멕시코 치아파스 주(州)에서 시작된 원주민 무장 봉기. 멕시코의 농민 혁명가 에밀리아노 사파타의 이름을 딴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EZLN)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가장 착취받고 억압받는 자들의 투쟁을 호소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오아하카 운동

2006년 5월 교육 사유화와 교육예산 삭감에 맞선 오아하카 주(州) 교사 7만 명의 전면 파업과, 같은 해 7월 멕시코 대선의 부정 선거 의혹 때문에 일어난 저항이 결합해 몇 달 동안 이어진 대규모 저항 운동. 운동의 기세에 놀란 주지사는 도망쳤고, 3백50개 단체가 모인 오아하카민중의회는 오아하카의 통치 기구를 자임하기도 했다.

같은 해 9월까지 전국적으로 정부에 맞선 항의 운동이 계속됐지만,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오아하카 운동을 진압했다. 그러나 이 운동이 민중에게 준 영감 때문에, 신임 정부는 이듬해 2월 신자유주의 조치에 맞선 대규모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전교조 조합원이 알아두면 유익할 영국 강사·교직원 파업 소식

조합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대학 구성원 모두의 지지를 끌어내는 효과를 내다

10월 31일, 영국에서 대학 강사와 교직원들이 하루 파업을 벌였다. 2008년 이후 실질임금이 13퍼센트 깎였는데 대학사용자연합이 임금을 고작 1퍼센트 올려 주겠다고 하자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강사와 교직원들은 7년 만에 파업에 나섰다.

당초 대학사용자연합은 대학 노동조합의 공식 조직률이 8퍼센트 수준인 것을 들먹이며 “대부분의 직원들은 학생과 대학에 누를 끼치는 행동(파업)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마다 조직률이 들쭉날쭉하다는 것도 그들은 염두에 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약 1백50개 대학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했다. 강사들은 교실을 벗어나 “적정 임금 지불하라”는 팻말을 들고 대학 정문에 섰다. 도서관 역시 당일 대출과 반납 업무를 중지한다고 공지했다.

많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파업을 위해 출근과 등교를 하지 말아 달라는 노동자들의 호소를 보고 정문에서 발걸을 돌렸다. 한 노동자는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지금까지 학교가 이렇게 조용했던 적은 없었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도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민영화에 반대해 최근에 파업 직전까지 간 우체국 노동자들은 대학에 우편배달 왔다가 파업 농성자 대열을 보고는 차

랑 핸들을 돌렸다. 학생들은 파업 지지 현수막을 내걸었고, 일부 대학에서는 수업 강행을 막으려고 강의실과 건물을 점거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이 이렇게 ‘체급’을 뛰어넘어 파업 효과를 거둔 배경에는 긴축에 반대하는 광범한 정서가 있다. 여기에 3개 대학 노조가 초유의 공동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해 초점을 제공했다.

초점

파업 소식이 알려지자 <가디언>에는 파업을 지지하는 정규직 교수들의 공개 편지가 실렸고 <허핑턴 포스트>에서는 대학 파업에 대한 학생들의 찬반 기사가

실렸다. 사용자 단체는 <BBC>에 나와 파업을 비난하는 인터뷰를 했다.

파업이 이처럼 여론의 관심을 받자 노동자들은 “제2차세계대전 이래 가장 오래 지속되는 저임금” 처지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 교사·기자·운수 등 다양한 부문의 노동조합과, “자전거·기차타기 공동체”와 같은 풀뿌리 단체들도 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국제적 연대도 이어져 외국의 대학 교직원 노조들뿐 아니라 이집트 카이로 드링킹워터컴퍼니 독립노조도 바다 건너 지지를 밝혔다. 이처럼 파업은 노동자들 뒤에 더 큰 세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할 기회를 제공했다.

파업 당일, 한 노동자는 “나생 처음 파업에 참가해서 기분이 묘하지만 좋다. 아침 8시부터 빗속에서 피케팅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하루 파업은 충분하지 않지만 오늘 파업이 더 많은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적 초점이 형성되고 위력적인 공동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확인하자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높아진 것이다.

영국 강사·교직원들의 경험은 파업을 통해 광범한 지지 정서를 표면화시키고 조합원들의 투지를 북돋울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김종환

전교조

총투표 결과를 밀거름으로, 단체 행동에 돌입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김연오 전교조 전국대의원

전교조 총투표에서 조합원의 69퍼센트가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했다. 10월 19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교사결의 대회에 교사 무려 1만 명이 참가해 행진한 감동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

교육부는 10월 24일 전교조에 ‘노조 아남’을 통보한 후 전임자 복귀 압박, 단체협약 해지,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전교조 공동 수업에 대한 징계 압박 등 탄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 위임 없이 시행령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초저는 “그 자체로 무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서)다.

게다가 최근에 발굴한 ‘노사정위원회 활동 현황’ 문서에 따르면, 1998년 11월 13일 노사정위원회 제10차 상무위원회는 해직 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당연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서울신문>, <한국일보>, <문화일보>, <내일신문> 등 당시 언론들은 일제히 ‘해직 교사도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노사정위원회에는 노동부도 참여했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낸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11월 중순에 법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에 하나 법원이 전교조의 집행정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박근혜 정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비록 현재로서는 승률이 높지 않을지라도 그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라도 전교조 집행부는 전 조합원의 단체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쫓임과 통제

현재 집행부는 학생·노동인권 공동수업을 진행하고 노동자대회에 참가할 것을 조합원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은 그 자체로 전교조 탄압의 부당성을 알리고 조합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충분치는 못하다. 아쉽게도, 전교조 집행부는 총투표 이후 지금까지 전 조합원의 단체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박근혜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맞서겠다는 조합원들의 결의가 전 조합원의 집단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물론 연가 투쟁 한 번으로 전교조의 재합법화를 쟁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연가 투쟁을 통해 첫째, 전교조가 정부 공격을 결코 유순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둘째, 전 조합원 단체 행동은 조합원들이 힘을 느끼게 해 줘, 자신감과 연대의식을 끌어올릴 수 있고, 그 결과 전교조의 투쟁력과 단결력도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조합원들이 낱날로 학교관리자들과 교육 관료들의 쫓임과 통제에 시달린다면 사기가 떨어질 것이고 전교조의 조직 강화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셋째, 전 조합원 단체 행동은 우익과 정부, 사용자, 보수 언론 등의 비난과 함께 사회 전체를 논쟁에 휘말리게 만들 것이다. 비조합원 교사들과 학생들, 학부모들도 논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대의명분이 정부보다는 전교조 측에 있으므로 전교조로서는 손해볼 일이 없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교사, 노동자, 학생, 지식인 등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넷째, 전 조합원 단체 행동은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려는 일련의 교육 공격에 맞서 저항하기 위한 진지를 구축하는 데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탄압과 함께 교육 공격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자사고 등 특권 교육도 강화하려 한다. 교원평가를 개악해 교사 통제와 경쟁을 더 부추기려 한다.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를 승인하고 이참에 아예 국어·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 국가주의도 강화하려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격이 최선의 방이다.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전임자 복귀 명령 등 정부가 본격 탄압을 예고하는 있는 지금, 집행부는 전 조합원의 연가 투쟁을 호명해야 한다.

‘투쟁 무익론’은 왜 틀렸는가

전교조 내에서는 ‘투쟁 무익론’도 나온다. 연가 투쟁으로는 학교를 마비시킬 수 없기 때문에 파업의 효과가 없고, 사회적 지지로 말하자면 총투표로 충분히 확인됐기 때문에 대량 징계만 부를 연가 투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내실 있게 조직 준비를 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격’을 가하는 것이다. 순도 1백 퍼센트 실용주의적 입장이다.

사실, 총투표 때도 정부의 시정명령을 수용해 법외노조의 가시발길을 피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조합원들이 거부를 선택했다. 조합원 다수가 택한 원칙 있는 태도에 노동자 운동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로 답했다. 순식간에 8백 개가 넘는 단체들이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에 참여했다. 전국에서 전교조 조합원들과 노동·사회·시민운동 단체들이 함께 집회를 하고 홍보전을 하고 있다.

또,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후 교사 2백여 명이 새로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다른 부문 노동자들은 탄압에



전교조

굴하지 않고 거부를 결정한 전교조를 보면서 정부와 맞서 싸울 자신감을 얻었다고도 한다.

총투표에서 ‘실리’를 앞세워 실용주의적 결정을 했다면 결코 볼 수 없는 정치적 광경들이다.

실용주의적

물론 전교조의 연가 투쟁은 이윤에 직접 타격을 주는 파업은 아니다. 그렇다고 연가 투쟁의 의미를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전교조의 연가 투쟁은 박근혜 정부에 맞서 대대적인 항의 시위를 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탄압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로 나선다면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투쟁하는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영감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노동자 운동의 자신감이 커지고 투쟁이 발전하는 것은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여섯 군데에서 당선한 것도 2008년 촛불항쟁과 그에 고무받은 전

교조의 시국선언, 일제교사 폐지 투쟁 등이 축적되면서 보수 세력의 ‘반(反)전교조’ 선동이 결정적 힘을 발휘하지 못한 덕분이었다.

대중 투쟁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온건 개혁주의의 논리는 그래서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오히려 대중 투쟁이 일어나 노동자들의 정치 의식과 사회 전반의 이데올로기가 좌선화할 때가 진보 세력의 선거 도전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정치적 효과 때문에 정부는 전교조의 연가 투쟁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벌써부터 징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투쟁은 희생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이 단결해 단단하게 투쟁하느냐에 따라 그 희생은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희생을 무조건 경계하기 전에 얼마나 값진 희생인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선배 교사들은 개인적 희생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전체 노동자·피억압자 운동의 대의명분을 먼저 생각했다.

의 노동자 투쟁을 고무하기 등 — 을 이루는 데서 거의 또는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한다.

노동조합은 소수의 결연한 투쟁보다는 전 조합원이 단결해 단체 행동을 할 때 강력해질 수 있다.

따라서 연가 투쟁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투사들은 조합원들 속에서 전 조합원 연가 투쟁의 필요성을 참을성 있게 주장하고 설득해, 마침내 단체 행동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국에서 전교조 연대 운동이 전설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시도하자 10월 초 8백20여 단체가 모여 ‘민주교육수호와 전교조탄압저지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을 출범했다. 긴급행동 소속 단체들은 서울, 울산, 인천,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고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거부표를 호소하는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벌였다.

연대 단체들의 이런 활동은 전교조 내부에서 교사 활동가들이 거부표를 호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

정부는 전교조 탄압이 부당하다는 국내외의 여론에도 10월 24일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했다. 긴급행동은 10월 20일 운영위를 열고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전국행동은 전국 16개 시도지역에서 전교조 방어 공대위를 구성하고 집회, 홍보전 등을 열 것을 호소했고 16개 시도 중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대위가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10개 지역(15개 구 포괄)에 전교조 방어 공대위가 만들어져 촛불집회, 홍보전 등을 벌이고 있다.

활활

박근혜 정부의 공세에 전교조가 저지선을 구축하자, 박근혜에 반대하는 교사들은 고무받았다. 많은 전교조 교사들이 조합비를 납부하려고 CMS를 신청하고 있고,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2백여 명의 교사들이 새로 전교조에 가입했다.

법외노조화 공격 이후, 분회를 창립하거나 가입서(CMS신청서)를 작성해 지부 사무실이나 집회로 직접 가져오거나 1인 분회(한 학교에 조합원이 1명인 경우)가 5~6인 분회로 성장했다는 소식이 전국 곳곳에서 들려 온다.

서울의 한 지회장은 정부의 법외노조 공격 이후 지회의 많은 조합원들이 전국 교사대회를 비롯해 여러 집회에 참가하고 조합비 납부 CMS도 기존 조합원의 1백 퍼센트 가까이 조직되자, “(우리 지회)가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다 타버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지역의 진보적 활동가들은 법외노조 통보 후 전교조 교사들이 지역의 연대 활동에 열의 있게 참가하고 있어 지역의 연대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후 전교조 지도부는 아직 전 조합원들이 참가해 노동조합으로서 힘을 발휘하고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수 있는 투쟁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 지도부에 가하는 전교조 내 일부 활동가들과 일부 교육·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온건 개혁주의의 압력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전국행동과 지역 공대위의 여러 활동가들이 ‘공대위는 적극 구성했는데, 어떤 연대 활동을 벌여야 할지 막막하다. 전교조의 투쟁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정부의 본격적 탄압이 예고되는 지금, 전교조 지도부는 총투표로 드러난 전교조 조합원들의 의지를 전 조합원 연가 투쟁 등 집단적 투쟁으로 이어 가야 한다. 강력한 단체 행동이 있어야 강력한 연대도 구축할 수 있다.

김인숙